정신의 힘, 인간의 사람다움

막스 쉘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 즉 인간의 자기이해는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본 희랍인은 이성적인 삶을 이상으로 삼았고, 인간을 신의 피조물로 본 중세인은 신의 뜻을 실현하는 신앙생활을 삶의 전형으로 삼았다.

이 물음을 이렇게 변용해 보자. 인간은 무엇으로 인간이 되는가?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가? 그러면 이 물음에 대해, 정신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것도 이상과 가치를 지향하는 정신이 바로 그것이라고 대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에 힘입어 인간이 생명체의 한 종(種)으로 격하(?)된 이래, 인간에 관한 많은 과학적 탐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눈에 보이는 인간의 신체로 환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래야만 인간 본질에 대해 객관적 지식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뇌과학은 인간의 사유활동뿐 아니라 감정이나 의지의 작용까지도 뇌수 안의 정교한 물리화학적 작용으로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도덕적 심성마저도 뇌과학의 탐구대상이 된다.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기술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재현하는 기계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논리적 사유활동에 국한하자면 슈퍼컴퓨터는 이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 미구(未久)에 미소 짓고 눈물 흘리는 로봇이 등장한다면 인간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 인간은 무엇으로 여전히 인간으로 남을 수 있나?

막스 쉘러(1874~1928)는 인간의 삶을 생명활동과 정신활동으로 나눈다. 그리고 감각적 지각, 의욕, 지능적 사유활동까지도 모두 생명활동으로 가름한다. 여기까지는 동물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진정 인간이 되는 것은 이 모든 생명활동과는 원리적으로 전혀 다른 정신활동에 있다고 본다. 이때 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사실의 세계를 지각하고 논리적으로 사유해 실용적 지식을 얻고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신이 없는 동물에서도 볼 수 있다. 정신은 주어지지 않은 것, 사실의 세계를 넘어서는 것, 즉 사물의 본질과 미적 · 도덕적 가치 같은 형이상학적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인간은 바로 여기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쉘러는 인간이 진정 인간이 되는 것은 생명활동과는 원리적으로 전혀 다른 정신활동에 있다고 본다. 이때 정신은 사물의 본질과 미적 · 도덕적 가치 같은 형이상학적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이 정신은 생명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에 있어 생명은 정신에게서 지침을 받아야 한다. 생명의 정신화(vergeistigung)와 정신의 생명화(verlebendigung), 이 양자의 총합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기계의 구분마저 모호해져 갈 만큼 인간의 삶이 점점 더 첨단기술에 의존해 가는 오늘날, 인간이 무엇으로 인간이 되는지 우리 모두 이 책을 보며 한번 더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낱장

손동현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1947년생. 서울대 철학과, 독일 마인츠대 철학박사. 한국철학회 · 한국교양교육학회 회장 역임. 「나의 삶, 우리의 현실」, 「공동체자유주의」 등의 공저 및 「역사의 인식」, 「비판이론」,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등의 역서가 있다.

특집

녹색부국을 꿈꾸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

1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변화의 시작
류필무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총괄과 사무관

16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가동
이민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18 '녹색인증'으로 '녹색투자' 더 쉽게
강혁기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장

20 2025년 '에너지 제로 아파트' 나온다
정경훈 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

22 도시에서 농사를 짓다!
이충원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장

24 2013년, 저탄소 플러그인車 상용화된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

26 한국에 '아셈 중소기업 녹색협력센터' 생긴다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28 규제 선진화해 기업 자율 · 창의 살려야
조홍식 서울대 법학과 교수

03 천천히 읽기
정신의 힘, 인간의 사람다움
손동현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인터뷰

08 한국형 사회통합의 새 패러다임 만든다
고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대담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특별기고

40 국가경쟁력 순위 23위, 역대최고 기록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쟁력전략팀장

경제정책해설

44 7월부터 관세납부 '무담보 방식'으로
장주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사무관

46 2012년, 세계 7대 과학기술강국 진입
박필환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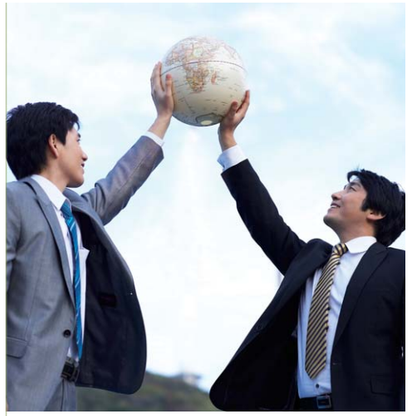
48 한국의 '비달 사순' 키운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

50 국가재정에 기업식 회계제도 정착시킨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장

52 유선통신 요금감면 全기초생활자로!
유인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

54 LPG 수입업 · 항공업 진입장벽 낮춘다
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56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율 1.6~1.8%로 내렸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



세계는 지금

33 OECD 이슈
리베이트 규제 놓고 미국 · 유럽 의견차
윤수현 주OECD대표부 참사관

정책 그 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80 협의는 의무, 조정은 자율에 맡긴다
김솔나 나라경제 인턴기자

81 "최소한의 법적 장치일 뿐, 상생협력이 중요하죠"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서기관

82 "CEO 마인드가 중요"…"상생협력은 주고받는 것"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83 자율조정하면 마일리지 쌓아주는 것도 바람직
김관보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연중 기획

작지만 강한 기업

84 토종 펭귄 '뽀로로', 세계 동심을 사로잡다
최종일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 대표

86 중국, 4년 만에 5배 급증 … 한국은?
유재혁 한국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집중토론

36 공기업 선진화, 현재 좌표와 해법은?
고영선 KDI 재정 · 사회정책연구부장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이달의 이슈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세계와 나눈다

62 원조 받아 성장한 한국 … 주는 것은 아직 미흡
박구연 국무총리실 개발협력기획과장

64 KSP 통해 경제한류 일으킨다
허장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66 KSP 발굴사업 차관자금으로 적극 지원
서귀원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사업부장

68 2020년 베트남은 '산업화된 중진국'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70 선택과 집중으로 무상원조 효과 UP!
최성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장

72 "세계적으로 원조기관의 모범 보이고 싶다"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74 中, 대외원조 통해 개도국 영향력 확대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팀장

76 무리한 규모 확대보다 진정성 보여야
설광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칼럼

30 와신이 본 한국경제
Bloomberg, "그리스는 한국을 본받으라"
이성신 KDI 경제뉴스분석팀 책임전문원

32 나라 밖 경제
미궁에 빠진 유로존
강지은 KDI 경제뉴스분석팀 책임전문원

42 김 대리의 환경노트
도심 속 골드러시 '도시 광업'
유복환 환경부 감사관

58 그들은 바쁘다
안전한 · 편리한 · 쾌적한 도로, 우리 손으로
손종철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장

87 마음 들여다보기
한국인의 심리코드 '멋있는 보통사람'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88 클래식 카페
음악은 바흐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박소연 콰르텟엑스 바이올리니스트

90 통계로 본 나라경제
물가지수, 체감물가와 왜 다를까?
양동희 통계청 물가동향과장

92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

94 그 길을 걸었다 –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호젓한 쓸쓸함에 마음이 젖다
김경주 시인

98 시평
건설 부실, 이번만은 지원으로 해결해선 안돼
임경묵 KDI 연구위원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나라경제

2010. 6 [제21권 6호 통권 235호]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현오석 KDI 원장
편집인 김교식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실장 대행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윤성욱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박필환 과학기술정책과장
외교통상부 최철규 통상기획홍보관
행정안전부 조봉업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최명철 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 전응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노형욱 정책기획관
환경부 홍정기 정책총괄과장
노동부 박종필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김경욱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인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김보열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편집장 이재열
취재 · 편집기자 유성임, 안선경, 권기대, 표초희, 김솔나

배포 김경숙, 김정철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06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화 02-958-4656, 4654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0년 5월 31일(매월 말일 발행)
제21권 6호 (통권 235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02-958-4634
광고 문의 02-958-461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2-958-4312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 · 인쇄 성우애드컴(주)
사진 이래스튜디오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물을 살리는 아이디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에 느끼는 고마움, 물을 염려하는 마음, 물을 아끼는 방법까지···
물을 소중히 생각하는 2,600여 개의 마음이 모여 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를 빛냈습니다.
그 중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인쇄 광고 6편을 여기 내놓습니다.

생명의 원천, 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인터뷰

고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때 _ 2010년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곳 _ 위원장 집무실(종로구 창성동)
대담 _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한국형 사회통합의 새 패러다임 만든다

1938년 서울 生
서울대 정치학과, 미 시라큐스대 명예 법학박사
1961년 고시 행정과 13회
1975~1979년 전라남도 지사
1981년 교통부장관
1981~1982년 농수산부장관
1985~1988년 제12대 국회의원
1987년 내무부장관
1988~1990년 제22대 서울특별시장
1996~1997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1997~1998년 제30대 국무총리
1998~2002년 민선2기 서울특별시장
2003~2004년 제35대 국무총리
2008년~현재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2009년~현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이재열 : 취임 이후 5개월여가 지났다. 간단한 소회를 밝힌다면?
고건 : 지난 몇 달간 무척 바빴다. 위원회의 기본방향을 잡고 각계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도 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갈등 요인에 대한 실천적 정책 대안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과거 공직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리에 임하고 있다.

이재열 :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가?
고건 : 올 1월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열 분 중 여덟 분이 사회갈등이 10년 전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에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이 복합적으로 중층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이 오랜 기간에 걸쳐 심화됐다면, 계층갈등은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악화된 문제이다. 중산층 붕괴나 비정규 · 저임금근로자 증가는 왜 계층갈등이 심화되고 있는지 잘 말해준다. 다가오는 잠재적 사회갈등에도 주목해야 한다. 세대 · 남녀 · 다문화 갈등은 지금으로선 그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가장 핵심적 갈등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지금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뒤늦게 상처가 커진 후에 치유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재열 :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만큼 사회통합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고건 : 위원회는 한국사회의 갈등 요인을 분석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적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는 먼저 정책으로서의 사회통합이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요인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시스템으로서의 사회통합이다.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은 예방적인 것인데, 그래도 다원적 사회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 즉 사회통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있다. 세 번째는,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과 같이 협약을 통한 사회통합이다. 마지막은 문화로서의 사회통합이다. 민주주의의 성숙된 대화 · 토론의 문화,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 문화로서의 통합이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통합의 새 패러다임으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재열 :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문제가 학자 몇몇 사람이 모여 토론하고 선언한다고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닐 텐데.

고건 : 물론이다. 그래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인 협의 과정도 거치고 있다. 한국적인 통합 패러다임은 글로벌 시대에 선진사회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전략 모델이기도 하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새 경제모델을 모색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따라잡기 전략'을 통해 여기까지 왔지만,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위원장에 취임한 후 '보수-진보 맞짱 대토론회'를 연 것도 그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가 과거사를 놓고 다퉜다면, 이제는 미래를 얘기하자는 것이다.

이재열 : 토론을 진행해보니 희망적인가?

고건 : 의외로 희망적이었다. 4월 말 현재 두 차례 보수-진보 대토론을 했다. 예전에는 서로 주장만 있었고 소통이 없었다. 이제는 보수-진보의 차이점도 부각되지만 그 속에서 공통점도 떠오르고 있다. 합의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있다.

이재열 : 구체적으로 어떤 결실이 있었나?

고건 : 지난 3월 31일 1차 토론회는 '한국사회 이념논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보수측의 박효종 서울대 교수와 진보측의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얘기를 나눴다. 이들은 인본주의, 민주주의와 시장제도 등 6개 항을 공동 제안했다. 4월 26일 진행된 2차 토론회는 '경제, 자유시장경제인가 제3의 길인가'를 주제로 보수 입장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진보 입장의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공통점을 모색했다. 두 교수는 우리 헌법의 경제관이 기업의 자유와 시장에 대한 개입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등 7개 항을 합의·발표했다.

올해 총 10회로 계획된 토론의 결과를 나중에 종합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한국적 사회통합의 새 패러다임을 도출하려 한다. 지금 합의가 잘 되고 있어서 연말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웃음).

이재열 :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들은?

고건 : 10대 핵심 프로젝트, 국민제안센터(소통과 화합 마당) 운영, 사회갈등의 모니터링과 영향평가 등에 주력하고 있다. 10대 프로젝트는 심각한 갈등요인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속 위원들과 소장학자들이 다섯 차례 난상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지도층 제몫하기, 보수·진보가 함께하는 공동프로젝트, 세대 일자리 공존 프로젝트 등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국민제안센터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상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회갈등 모니터링과 영향평가는 사회통합국민의식 조사, 사회통합지수 개발, 사회통합 모니터링센터 운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갈등영향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가 통합친화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이재열 : 계층 간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한 복안은?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고건 : 용산 사건은 크게 3단계를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쟁점화됐다. 우선 용산재개발 세입자 대책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2단계는 그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절차 없이 바로 화염병과 경찰특공대가 극한적인 충돌을 했다. 그리고 3단계로 정치쟁점화된 것이다. 위원회는 세입자 대책의 갈등요인을 해소해 제2의 용산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갈등발생시 상호신뢰할 수 있는 갈등해소의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열 : 지역 간 갈등·분열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오랜 숙제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고건 : 우리나라 지역 간 갈등은 국민의 시민의식과 토론문화 미성숙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치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합리적 공론화의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재열 : 외국인·결혼이주민 및 여성 일자리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고건 : 외국인·결혼이민자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과 이들 자녀의 양육·교육 문제가 커지고 있다. 2009년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58만명, 결혼이주민 17만명, 외국인 주민 자녀는 11만명에 달한다. 이들 외국인·결혼이주민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고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21세기형 가족'들에게 일과 삶의 조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 "많은 국민들이 사회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 걱정하는 마음의 아주 조금만큼만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다."

이재열 : 갈등해결 절차를 제도화한다고 들었다.

고건 : 그렇다.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예방·해결시스템을 마련하려 한다. 정책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인의 참여·숙의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조정과 같은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을 검토하고 있다.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 활성화, 국무총리실 내 갈등해결지원단 등 정부 내 갈등해결 전문기구 설치 그리고 갈등 관련 교육·연구프로그램의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열 : 다산 선생의 '지자이염'(知者利廉)이 좌우명인 것으로 안다. 어떤 계기로 이 원칙을 지켜오게 됐나?

고건 : 지자이염은 길게 보면 청렴한 것이 이롭다는 의미다. 내 좌우명 세 가지 중 하나다. 공직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선친은 야당 국회의원이셨다. 그때 나는 내무부 수습사무관이었는데, 아버지는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돈 받지 마라." 물론 그 말씀은 지켰지만, 사실 처음에는 야당 국회의원 아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수칙으로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다산의 염자안염(廉者安廉,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히 여긴다)의 경지는 아니다(하하). 두 번째는 "줄서지 마라"였다. 일로써, 실력으로써 공직을 개척하라는 말씀이셨다. 서울시장·총리 등을 지내면서 맡은 일에 지성을 다할 때 감천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민(感民)은 되더라. 세 번째는 "술 잘 먹는다고 소문내지 마라"였는데, 이것은 못 지켰다.

이재열 : 그렇다면 위원장은 역사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은가?

고건 : 사회통합을 위해 온 생애를 쏟았던 사람? (웃음)

이재열 : 끝으로, 국민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린다.

고건 : 연초 종교지도자들을 순방했을 때 정진석 추기경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나. 그러나 사람인 한은 공통점이 있다.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공통점을 찾아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게 되면 큰 물줄기는 잡힌다"고 말씀하셨다. 크게 공감한다. 생각의 다름을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 걱정하는 마음의 아주 조금만이라도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해구시대 바다인류로의 진화

이제, 지구(地球)가 아니라 해구(海球)입니다

2012 여수세박이 바다인류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경제, 블루이코노미를 창조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2050년 미래 해양과 인간의 만남을 2012 여수세박에서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는 제 4의 도약
88올림픽, 93대전박람회, 2002월드컵에 이은 대한민국의 네 번째 도약을 이끌어 냅니다

인류에는 제 4의 물결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에 이은 바다혁명을 통해 블루 이코노미 시대를 열어갑니다

녹색부국을 꿈꾸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지난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령과 함께 발효됐다. 이 법의 제정과 공포로 한국은 미국 · 호주 · 일본 등 선진국보다 한 발 앞서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을 완성했으며,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바야흐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 에너지 사용 감축이 본격화되고 녹색기업 인증제 등으로 산업계의 큰 틀이 바뀔 전망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부처의 정책, 기업의 대응방안을 자세히 살펴본다.

류필무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총괄과 사무관
ryupilmu@korea.kr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변화의 시작

지난 4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선포식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다음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에너지 ·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본 · 노동력 등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의 한계를 돌파하고,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 탄소시장 등 신성장동력 확보 ·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을 앞장서 제 · 개정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녹색 경주'(Green Race) 중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줄이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20% 향상시키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확대하는 「20 · 20 · 20 기후변화에너지종합법」을 제정(2008년 12월)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한 「기후변화법」을 제정(2008년 11월)했고, 프랑스는 「그르넬환경법」을 제정(2009년 7월)해 2020년경까지 유럽 내 가장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은 온실가스 미감축 국가에 관세부과를 규정한 「청정에너지안보법안」이 하원을 통과(2009년 6월)했다.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및 환경세 도입을 규정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기후변화 · 에너지 · 지속가능발전 등 녹색성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 통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제정했다. 2009년 12월 2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후, 시행령과 함께 2010년 4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본법은 정부 · 기업 · 국민에게 녹색경제 실현, 녹색기술 · 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녹색성장 이행 책무를 의무화 ·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큰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주요 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시행, 온실가스 · 에너지 인벤토리(inventory, 재고조사) 구축,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국민 · 업계의 자율성에만 의존하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적 난제를 극복할 기틀을 구축했다.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미국 · 일본 ·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에너지 규제 법률을 쉽게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전 세계에 '나부터(me first)' 라는 정신을 보여줬다.

EU · 영국 · 프랑스에서 제정한 법률이 주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사회 발전에 무게를 둔 지원법이라는 측면에서 창의성과 독자성이 있다.

에너지 규제보다 경제사회 발전에 초점

둘째, 기본법은 녹색기술 R&D 지원, 녹색산업 육성 · 지원, 기존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녹색화 촉진, 녹색금융 활성화와 재원으로서의 펀드 조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실시,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원,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의무화, 녹색국토 · 도시 · 건물 · 교통 확대 등 녹색성장 지원정책을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 환경규제가 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즉, EU · 영국 · 프랑스에서 제정한 법률이 주로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제사회 발전에 무게를 둔 지원법이라는 측면에서 창의성과 독자성이 있다.

셋째, 기본법은 녹색경영 성과공개, 환경친화적 세제운영, 배출권거래제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녹색건축물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관리, 친환경농림수산의 촉진, 녹색 라벨링 제도, 녹색교육 실시 등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기업의 생산활동, 국민의 생활양식을 고효율 · 저탄소, 자원절약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법은 정부 · 지자체 · 기업과 국민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녹색성장 정책 방향을 사전에 알려주는 '신호(signal)'법 이다. 특히 정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도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타법의 제 · 개정 시에도 기본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토록 해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기본법은 녹색기술 · 산업의 표준화, 규제의 선진화, 국제규범 대응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과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녹색규제에 사전 대비토록 했다. 선진국들은 이미 녹색 선도시장을 창출해 이를 표준으로 만들고 후발국가에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까지 130g/km으로 제한했다. 미국은 2016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34.1mile/gallon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2010년 4월)했다. 기본법에는 국내 판매 자동차의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내 기업이 녹색기술 R&D 및 체질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정책의 효율적 ·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 계획과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계획으로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구심점으로, 부문별 · 기관별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세우게 했다. 또한 녹색성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체계적 · 효율적 이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인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도록 했다.

녹색성장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가 환경 · 자원 위기를 넘어 새로운 국가성장 모델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활용하는 것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여정은 장기간의 인내심을 요구하며, 기본법이 안내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다만 기본법이 제정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을 관련 법령에 충실히 반영하고 국제 추세에 맞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경제

이민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lowcarbon@korea.kr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가동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주재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산업계 간담회'가 지난 4월 28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열렸다. 정유, 화학, 자동차, 시멘트 등 대표 기업인들은 두 부처 장관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및 재계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올해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그간 여러 차례 시도됐던 기후변화 대응입법을 완성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기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비단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규제적 제도뿐만이 아니라, 녹색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대책의 마련까지 종합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법의 핵심은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며, 그 핵심에는 대규모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보고제도와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온실가스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연합-배출권거래제(EU-ETS)에 가입한 27개 EU 회원국뿐이다. 일본 · 미국 · 호주 등이 기후변화 대응입법을 통해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치적 · 경제적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기존 환경법령을 활용한 온실가스 규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 수준의 시범적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한다. 미국은 올해에서야 배출량 의무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는 매우 선도적인 입법이다.

올해 9월, 온실가스 관리업체 600여곳 지정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는 연간 2만5천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혹은 사업장 합계로 연간 12만5천톤 이상을 배출하는 회사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배출량에 관한 체계적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하루에 2만5천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루 약 22톤의 석유를 연소시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해당된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이러한 회사 혹은 사업장의 배출량을 합하면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7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며, 그 수는 사업장 단위로 약 600여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약 600여개 사업장을 관리함으로써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70%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 종합적 지침과 기준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 지경부 · 환경부 · 국토부는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부문별 관장기관 간 사무의 중복이나 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 평가 등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6월까지 관리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관리업체를 지정 · 고시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기업은 관리업체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리업체로 지정된 회사 혹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9월까지 차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혹은 에너지 사용량 목표가 부과되고, 해당 업체는 12월까지 차년도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1년간 이행계획을 실행한 업체는 차차년도 3월까지 이행실적 보고서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제3자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필요시 개선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해당 기업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11년 이행목표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관리업체 지정을 9월까지 완료한다는 수정계획을 가지고 있다. 법에 명시된 시행 첫해(2010년) 이전 3년간(2007~2009년) 명세서 제출도 2011년 3월까지 연기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따라서 올해 9월에 지정된 관리업체는 내년 3월까지 2007~2009년간 명세서와 2010년 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연간 2만5천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으로, 그 수는 사업장 단위로 약 600여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해당 기업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11년 이행목표를 부과하지 않고, 관리업체 지정을 9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760개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에 솔선수범

정부는 이번 제도 운영에서 목표 설정시에 업체별 투자계획이나 경기전망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달성이 불가능한 과중한 목표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실적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표창, 녹색기업 지정 및 녹색경영 체제 인증시 가산점, 에너지 절약시설 및 환경개선자금 융자시 우대, 정부 R&D사업 신청시 가산점 등 각종의 인센티브 제도는 물론,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조기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공공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약 760여개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중에서 관리업체 기준을 상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관리업체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관리를 받게 된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부분이다. 규제적 제도로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영역이다. 전통적으로 환경관리에서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으로 지칭되는 영역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이러한 '온실가스 비점오염원'에 대해 그린스타트 운동, 탄소포인트 제도, 에코 드라이브,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등 녹색생활 운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어느 한 나라도 빠져나가서는 안되는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국제사회에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고, '녹색 G7 국가'로 나아가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 나라경제

강혁기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장
khg6@mke.go.kr

'녹색인증'으로 '녹색투자' 더 쉽게

정부는 녹색성장을 향후 60년간 국가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2009년 7월 6일 발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년 4월 14일 시행) 등 구체적인 전략 및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관련 재정투자계획만 하더라도 각각 11조3천억원·4조6천억원에 달한다.

투자 불확실성 해소 위해 녹색인증제 도입

녹색산업 육성과 관련해 녹색기술 개발, 혁신활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포함)에 더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부분이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이다. 녹색금융은 아직까지 명확히 정의되는 것은 아니나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을 통한 환경개선, 관련 금융기법 개발 등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다. 특히 녹색금융 상품·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민간투자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독일 등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저리의 대출자금을 녹색산업 분야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 역시 기후변화사업 등 녹색기업·프로젝트 전용 정부재원을 공급하는 「녹색은행법」(Green Bank Act)을 발의(2009년 3월)했다.

특히 네덜란드 'Green Fund Scheme'의 경우 정부 녹색확인서(Green Certificate) 발급과 연계해 녹색금융상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소비자·은행·기업·정부 모두 녹색투자가 환경에도 일조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얻을 수 있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장기간에 걸친 투자·회수기간, 외부효과 등 녹색산업 분야의 특성상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충분한 자금 유입이 안 되는 점이 지적됐다. 녹색성장 정책의 본격 추진과 함께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 우대, 관련 상품 출시 등 지원책이 마련됐음에도 지원규모는 아직 충분치 못하다. 이러한 부분이 금융권에서 정부 차원의 녹색인증을 요청하게 된 사유다.

녹색인증 홈페이지(http://www.greencertif.or.kr) 첫 화면. 녹색 인증을 받으면 세제지원은 물론 자금, 특허, 수출, 마케팅, 인력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녹색인증'은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 분야인지를 인증하고, 녹색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해 적격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투자자들이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인증 사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녹색예금·녹색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부여해 금융기관이 녹색투자를 위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인증 기업의 정책자금·R&D·마케팅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인증·확인 대상은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보전 등 10대 분야의 유망기술), 녹색사업(녹색기술 10대 분야 중에서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95개 사업) 및 녹색전문기업(녹색기술을 사업화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이며,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인증기준은 〈표 1〉과 같다.

기업 등 신청인이 녹색인증을 신청할 경우, 전문 분야별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된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8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구성한 녹색인증심의위원회가 이를 최종 확정하면 녹색인증서(유효기간 2년)가 발급된다. 모든 절차는 신청이 접수된 후 45일 이내에 완료된다.

녹색인증 받은 기업에 자금 우선 지원

정부는 녹색인증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실시했다.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유망 녹색기술 분야, 즉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에서 제시된 범주를 감안, 기술성·시장성·전략성을 갖춘 10대 분야(61개 중점분야)를 녹색기술 인증 분야로 최종 결정(2009년 9월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녹색기술의 경우 정량적 기술수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300명이 넘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작업에 참여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내지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 규격을 제시함으로써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최선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녹색인증제는 '인증'이라는 수요자 지향적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은 유망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자금지원한다.

〈표 1〉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인증기준

	인증기준
녹색기술	정량적인 기술수준을 충족하고, 기술성(40점), 시장성(30점), 녹색성(30점)을 종합평가해 70점 이상을 획득
녹색사업	녹색기술 활용성(30점), 환경 기대효과(50점), 사업 타당성(20점)을 종합평가해 70점 이상을 획득(단, 녹색기술과 직접 관계없는 자전거 도로사업 등 공공인프라 성격인 경우에는 기술활용성(30점) 평가를 생략, 50점 이상을 획득)

정부는 민간투자자들이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인증사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녹색예금·녹색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녹색투자를 위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이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사업화할 때 필요한 정책자금·R&D·마케팅 활동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 2〉 녹색인증제 정부지원 내용

	세부 지원방안	세부 내용
자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기술평가보증 우대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대상	자금지원시 융자한도 등 배제 보증료 0.2% 감면, 평가시 우대 2009년 5개 펀드, 7,075억원 조성
후속 개발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국가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 특허권리 조기 부여
해외 판로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수출계약 등 손실 보상 해외전시회 지원 수출기업화 지원	참가업체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 보험/보증료 우대, 이용한도 확대 전시회 참가신청시 가점 부여 지원대상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
기타	해외 기술인력 도입 지원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경제주체 측면에서 소비자인 국민은 녹색인증을 통해 녹색기술·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한편 직접 투자자 입장에서 녹색산업 분야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생산자인 기업·연구소는 수요자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은행 등 금융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금융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녹색인증제를 통해 소비자·기업·은행·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 간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공동의 인식과 노력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됨으로써, 유망 녹색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등 우리 경제의 녹색산업구조로의 전환·혁신활동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경훈
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
khjeong@mltm.go.kr

2025년 '에너지 제로 아파트' 나온다
(zero)

건물·교통 부문은 국가전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서 40%를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효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제53조)과 녹색건축물 확대(제54조)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건물의 에너지소비는 물론 교통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건물·교통 부문의 체계적 감축노력 없이는 국가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밸리' 상설 주택문화관의 에너지 제로(zero) 아파트 내부. 복층 유리 안에 태양전지(solar cell)가 생산한 전기 에너지로 블라인드 각도를 자동 조절해 채광량을 맞추고 실내온도를 관리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

정부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1%로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무엇보다 창호·벽 등 부위별 단열기준을 올해 중 약 20% 강화하고 열손실이 큰 창호(손실률 52.7%)는 장기적으로 2배 이상 강화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법적 기준 대비 15% 절감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25년까지 에너지 제로(zero)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최소 에너지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009년 10월 그린홈 건설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보금자리 시범지구에 기존 대비 사용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절감 가능한 그린홈 설계를 반영했다. 아울러 신축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가 반드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을 기존 6개 시설 외에 모든 신축·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신축 공동주택 외에 올해에는 신축 업무용 건물까지, 2012년까지는 기존 주택과 업무용 건물까지 적용한다.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취등록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을 모든 신축·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신축 공동주택 외에 올해에는 신축 업무용 건물까지, 2012년까지는 기존 주택과 업무용 건물까지 적용하고,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저에너지·고효율 녹색교통으로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를 2020년 BAU 대비 33~37%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에너지·고효율 중심의 녹색교통으로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다소비형인 기존의 도로·자동차 중심 체계를 철도·해운·그린카·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시설확충 위주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첨단 IT기술과 신교통기술을 결합해 기존 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 정부는 도로 중심 체계를 탈피하기 위해 전체 SOC 투자 중 철도 비율을 현재 29% 수준에서 2020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가용 운행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구현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적은 비용으로 철도의 정시성과 속도, 버스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BRT; Bus Rapid Transit)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중 수도권에 중앙버스전용차로 28.8km를 구축하고 하남~천호 구간 광역 BRT가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용 출퇴근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광역급행버스 운행노선을 기존 6개에서 연내 16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고속버스 환승제도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물류체계를 철도·연안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8%, 18%인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각각 20%, 2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로화물을 철도·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환교통(modal shift)을 적극 촉진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시설투자,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개개인의 운전습관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운전(eco-drive) 교육과 체험시설 확충을 통해 연간 200만명 이상이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형교통체계(ITS)를 올해 2,415km까지 구축하고 하이패스 이용률도 50%까지 높이는 등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항공·철도·항만 등 교통 모드별로도 연료소모를 줄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물·교통 업체들도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 기준에 해당되면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이 된다. 현재 건축물, 여객운송, 물류, 항공, 해운업종별로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기초통계와 환산기준 검토 및 분석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자발적 감축협약이 업종별로 추진되고 있다. 건물의 경우 백화점·공항·병원 등 대형건물 12개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향후 3년간 연평균 1~6% 절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물류업체의 경우에도 100대 이상 운송업체와 대형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자율협약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중 5개 내외 업체가 정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업체별로 부여될 의무감축목표(2012년 이행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과 원칙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교통 부문 대상업체들이 자가용 수요흡수와 물류비용에 직결된 대중교통과 국가물류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계적인 감축보다는 에너지 이용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온실가스 배출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려 한다.

이충원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장
chwlee@korea.kr

도시에서 농사를 짓다!

식품이 생산되는 데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고려해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콩, 두부 등 고단백 채식과 조리 열을 줄인 저탄소 밥상이 최신 트렌드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농림수산업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자연을 활용해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림수산업의 특성상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내포돼 있다. 그러므로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며,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해야할 필연적 과제다.

생활 속 녹색성장, 녹색 식생활 정책 추진

정부는 농식품 분야의 녹색성장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올 2월 '국가 녹색성장 전략'과 연계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국민행복과 국가 번영을 선도하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의 구현이 정책 비전이다. 실제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을 2020년까지 15.7%로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비중을 같은 기간까지 15%로 늘릴 계획이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9대 추진과제와 50개에 달하는 실천 프로젝트를 발굴·추진 중이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난 4월 선포식을 가졌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선포식은 녹색성장 정책 추진기반의 완성이자 본격적인 정책추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제는 정부 각 부처별로 계획한 여러 녹색성장 정책에 속도를 내고,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 때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녹색 식생활과 도시농업이다. 식생활은 삶의 근본이다. 가장 밀접한 생활양식 중 하나다. 그러므로 잘못된 식습관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생활 속의 녹색성장인 '녹색 식생활 정책'을 추진한다. '녹색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환경),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건강),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배려)하는 식생활을 말한다.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뒷받침할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식생활 실태조사 실시 및 '녹색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국내외 식생활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종합 제공하는 '녹색 식생활 정보 114'(가칭) 포털 사이트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식생활교육조례' 제정도 지원할 것이다.

서울 중화동 한내들어린이집 옥상에 마련된 텃밭. 감자·상추·고추·두릅·앵두 등 20여 종의 채소와 과일을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직접 기른다. 이 어린이집의 옥상 텃밭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뒷받침할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식생활 실태조사 실시 및 '녹색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국내외 식생활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종합 제공하는 '녹색 식생활 정보 114' 포털 사이트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공터·아파트 테라스를 텃밭으로 가꿔

식품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식품 탄소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산물 및 이를 가공한 식품의 생산·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 녹색 식품의 생산을 독려하고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치원·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식생활 연구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재량·특별활동, 급식시간, 방과후 교실에 '녹색 식생활체험 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서울·부산 등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도심 공터나 아파트 테라스에서 텃밭을 가꾸고, 도시의 랜드마크로 도심 한가운데 빌딩형 농장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될 것이다. 도시와 농업이 함께 어우러져 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도시 환경이 개선되는 윈-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녹색산업인 농업을 농촌에서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도시에서도 농업을 통해 서로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도시와 농업을 동시에 살리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에서 농업을 하게 되면 도시열섬 현상 완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도심환경 개선과 도시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한 시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칭)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포럼 운영 등 세부적인 실천 이행방안을 수립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
daklchoi@korcham.net

2013년, 저탄소 플러그인車 상용화된다

지난 3월 4일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개최된 '2010 제네바 모터쇼'의 초점은 하이브리드카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였다.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고 녹색산업 선도 국가를 실현하려면 전 산업 · 기업의 녹색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 · 기업별 비전과 역량 격차로 산업과 기업의 체질을 단기간에 녹색친화적으로 균형 있게 바꾸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4월 발표돼 기업들의 온실가스 · 에너지 사용 감축이 본격화됐다. 특히 녹색기업 인증제는 우리 산업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은 내년 3월까지 온실가스 ·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9월 감축목표를 부여받아 2012년부터 강제 감축을 해야만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인 녹색화를 생산 · 경영활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처럼 친환경 · 녹색화의 길에 들어선 우리 산업계가 녹색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선도 기업들의 녹색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보자.

철강, 에너지효율 1위 달성 목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철강 · 석유화학 · 섬유 산업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친환경 공정혁신, 친환경 소재 공급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공정혁신을 통해 에너지효율 세계 1위 달성을 위한 CO_2 배출저감 기술개발, 에너지절감형 소재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를 선도하는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이다.

석유화학산업은 그린화학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에코-산업단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플랜트 공정고도화, 기초원료 다양화 및 저탄소 · 고부가가치 소재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선두 기업으로는 GS칼텍스, SK케미칼이 있다.

섬유패션산업은 2020년 세계 4위 그린섬유 강국 달성을 목표로 초경량 그린섬유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린섬유 국산화 및 핵심 원천 기술 확보, 섬유생산 공정 녹색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카본밸리 구축 및 녹색섬유 클러스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대표 기업으로는 효성, 필라 등이 있다.

LG화학은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동력을 저장하는 핵심부품으로 향후 시장이 급속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개념 친환경 선박 개발 주도

생산과정보다 제품을 사용 ·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주로 받는 자동차 · 조선 · 기계 산업에서는 수송으로 인한 CO_2 문제를 해결하고, 전후방 산업연계를 활용한 녹색산업 유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2018년 세계 4강 도약을 위해 2013년까지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플러그인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린카, 연료전지 개발일정 단축 및 조기 양산에 필요한 협력업체를 육성할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대 ·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LG화학 등이 대표 기업이다.

조선산업은 청정 조선해양시대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IT · ET를 융합한 신개념 친환경 선박 및 해양시스템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 기업으로는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있다.

기계산업은 그린테크놀로지 개발 및 고효율 청정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기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농 · 산업용 청정디젤엔진 개발 및 청정 화력발전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생산설비, 발전 · 담수설비, 기계설비 등의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선두 기업으로는 두산중공업, S&T중공업, LS엠트론이 있다.

초저전력 · 고효율 그린반도체 만든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출에 적극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 전기 · 전자산업에서는 대체에너지 관련 부품 개발 등을 신산업 창출로 연계시키고자 국제 환경규범 · 기준을 선도해 선진국의 친환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2020년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위해 초저전력 · 고효율 그린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에너지효율 시스템 반도체와 안정적 전력공급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태양광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등이 있다.

디스플레이산업은 디스플레이 강국 실현을 위해 Eco-LCD, Green-PDP, 초대형 솔라윈도와 같은 핵심 녹색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지 않은 패널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산과정에서의 청정화를 위한 폐기물 무배출(zero emission) 생산공정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표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있다.

디지털 전기 · 전자산업은 2020년까지 TV를 비롯한 6대 전기 · 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을 30% 향상시키기 위한 초절전 ·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생산 공정의 에너지효율도 30% 향상시키고 폐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을 100%까지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소재 · 부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선두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웅진 등이 있다.

한국에 '아셈 중소기업 녹색협력센터' 생긴다

중소기업청 · 외교통상부, 2010 ASEM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포럼

브라이언 맥도날드(Brian McDonald) 주한 EU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6~7일간 진행된 포럼의 모든 발제자가 한자리에 나와 각 세션에 대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간 협의체인 아셈(ASEM) 45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2010 ASEM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포럼'이 지난 5월 6~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중소기업청과 외교통상부가 공동 주최하고 KDI 외 4개 연구기관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2008년 베이징 제7차 ASEM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각국의 녹색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포럼 참석자들과 연사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선언문을 작성 · 선포했다. 연계행사로 녹색성장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들이 펼치는 '2010 친환경 에너지제품 경진대회'도 함께 개최됐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맥도날드(Brian McDonald) 주한 EU대사가 환영사를 맡았다. 이어서 '녹색성장과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마리오 아마노(Mario Amano) 일본 OECD 사무차장과 구자영 SK에너지 대표이사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본격적 세션은 6일 오후부터 시작됐다.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1세션에서는 볼프강 파프(Wolfgang Pape) EU 집행위원회 기업총국 정책담당관의 사회로 스웨덴 · 스페인 · 인도네시아 · 중국 · 독일 · 포르투갈 · 덴마크 등이 녹색성장을 위한 자국의 정책을 발표했다. 앤더스 해슬에이거(Anders Hasselager) 덴마크 에너지청 선임고문은 에너지 수출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시장 변화 적응을 국가가 적극 돕기 위해 세제혜택, R&D프로그램 개발, 지역혁신거점 육성, 민관협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레이왕(Lei Wang)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중소기업국 국제협력과장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 내 중소기업 입지를 강조했다.

2세션은 특별 세션으로 지난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제시한 '10 Technology Action Plans'에 대한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일본의 미키오 사토(Mikio Sato) 중앙전력산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일본 발전 부문의 청정석탄기술 발전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독일의 라이너 힌리히-랄베스(Rainer Hinrich-Rahlwes) 재생에너지협회 이사는 '독일 재생에너지 부문의 안정성 및 신뢰성 기본조건-태양광전소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의 김재섭 한국스마트그리드산업단장은 '제주실증단지-한국 스마트그리드 구현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둘째날 오전에 진행된 3세션에서는 녹색성장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 환경규제와 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표준화 · 상호인증,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검증, 전통산업 중소기업의 녹색화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존 크리스텐슨(John Christensen) 덴마크 유엔환경계획(UNEP) 리소센터 연구소장은 "EU나 유엔의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은 R&D 지원, 사업 인큐베이션, 기술개발 가속화, 투자펀드 조성 및 융자 프로그램 등 사업 진입부터 상업화까지 단계별 지원을 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승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이사는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가 중국 · 인도 · 멕시코 등 개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무역환경 규제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4세션에서는 녹색성장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성공 사례에 대한 구체적 발표가 이뤄졌고, 마지막 5세션에서는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의 사회로 4세션까지의 사회자가 모두 한자리에 나와 세션별 보고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 세션을 통해 한국에 가칭 '아셈 중소기업 녹색협력센터'(ASEIC;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를 설치 · 운영하자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은 협력방안 합의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실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국 중소기업청의 기본 입장에 모두가 호응함으로써 결정됐다. KDI 현오석 원장은 "로드맵과 실천이 함께 진행되는 '녹색협력센터'의 출범은 환경규제의 정보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적자원과 투자 계획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버트 비써(Robert Visser) OECD 환경국 부국장은 "한국의 리더십이 돋보인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시장표준, 금융 등 다양한 각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핀 이번 포럼이 매우 생산적"이라고 밝혔다. 녹색협력센터는 아셈 회원국 중소기업에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국의 녹색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미니인터뷰 이상훈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장

행사준비 기간과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1년 가까운 준비기간을 가졌다. 연사 초청 등 패널 섭외에 많은 힘을 들였다.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은 포럼 자체의 행사보다는 포럼 개최 후의 기대효과였다.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녹색협력센터를 출범시킨다는 목표가 이뤄졌으니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설립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8차 아셈 정상회의의 의제로 올릴 것이다.

녹색협력센터가 담당할 구체적 업무 방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또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녹색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자로서 역할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다.

포럼 기간 중 인도네시아와 업무협력 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들었다.

양국 중소기업의 녹색산업 촉진을 위한 무역 · 투자 등 녹색성장산업 관련 정책 · 정보 교환과 시범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올해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홍식
서울대 법학과 교수
hcho@snu.ac.kr

규제 선진화해 기업 자율·창의 살려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덴마크 코펜하겐 벨라센터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다함께 행동을'(taking action together)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긴 산고 끝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효됐다. 기본을 정하는 법임에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를 의심하는 음모론까지 제기된 것을 보면 기후변화와 대응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의 크기를 알게 해준다.

산업계, 녹색규제에 기업 부담 우려

하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를 사실(fact)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대법원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온실가스가 미국 환경법상의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이며 미국 정부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있음을 최종 판결했다.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 당사국총회는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해야 함을 과학적 견해로 인정했다.

'기본법'은 정부가 녹색성장에 기울이는 집중력의 정도가 얼마큼인지를 알게 해주는 의욕적 조문으로 가득 차 있다. '기본법'은 목표관리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수단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보조금정책 및 조세정책을 이용해 경제주체의 동기를 유발한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같은 제도를 통해 녹색성장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통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행정조직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에 진력하는 기업에게 '기본법'은 신설된 규제일 뿐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축하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예전과 같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신규투자를 위축하고 원가를 상승시키며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급증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86.8%로서 OECD 국가 중 1위다. 총배출량 또한 현재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세계 11위,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지난 100년 동안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도 세계 22위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다른 개발도상국과 구별되는 감축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망라된 인프라 구축에서 배출권거래제에 이르는 정책수단 사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피규제자가 중복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입법을 추진하고, 내용적으로는 무임승차자를 최대한 배제하고 공정한 책임분담이 이뤄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지구화, IT 혁명에 버금갈 정도로 경영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이슈로서 세계는 지금 '녹색 경주'(green racing) 중이다. 인터넷의 발명으로 남북 아메리카 대륙만큼 큰 시장이 새롭게 생겨났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정착되면 이보다 더 큰 시장이 탄생할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은 탄소를 흡수하는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지구의 대기'에 재산권을 설정해 이를 각국에게 할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IT 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새롭게 탄생한 시장의 일단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듯이 이제는 국가 역량을 모아 기후변화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중복규제 피하고 단계적 추진을

'녹색'은 2008년 발발한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를 규정하는 이 시대의 키워드다. 영국의 금융·에너지·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그룹이 '녹색뉴딜'을 영국 정부에 제안한 것을 필두로, 유엔환경계획이 '녹색경제'를, 미국 오바마 정부의 싱크탱크는 '녹색회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침체의 탈출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녹색 에너지 분야에 1,500억달러의 투자를 통한 500만개 일자리 창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돌파구로 녹색성장을 지목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고용 없이 성장 중이고, 새롭게 우리 경제를 책임져야 할 서비스 산업, 특히 지식 서비스 산업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산업 및 기술수준은 취약한 상태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2007년 기준 2.37%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선진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법'은 규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규제 도입 시에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지 않게 함으로써 규제 체계를 선진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법'에 망라된 인프라 구축에서 배출권거래제에 이르는 정책수단 사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피규제자로 하여금 중복 규제의 고통에서 벗어나 규제의 방향을 파악한 상태에서 투자 등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재분배효과가 큰 제도로서 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인 만큼 절차적으로는 이해관계인의 참여 하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무임승차자를 최대한 배제하고 공정한 책임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적응기간을 두는 '단계적 시행'을 추진해 제도시행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다양한 정책수단, 즉 직접규제·환경세·보조금·기술개발 지원, 사회경제적 인프라의 정비 등을 함께 사용하는 '정책조합'(policy-mix) 방식의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령 대상이 되는 배출자가 소규모이고 다수인 경우에는 모니터링과 검증이 곤란하게 되므로 명령통제식의 규제와 세제의 활용이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가격보다 배출삭감 대책비용이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장래의 삭감과 새로운 산업육성을 목표로 현 시점에서 그 대책기술을 보급하고 싶은 경우라면, 기술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규제 행정을 기대해본다. 나라경제

'외신이 본 한국경제'는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한 해외의 생생한 반응과 평가를 소개하는 난입니다.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THE TIMES
The Economist
The New York Times

Bloomberg, "그리스는 한국을 본받으라"

외환위기로 인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던 1998년 1월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 불렸던 금모으기 운동에 국민들이 동참했다. 사진은 1998년 1월 20일 정부청사 직원들이 금모으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5월 초 IMF의 구제금융이 결정되면서 그리스에서 강도 높은 긴축조치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 사태가 발생했다. 당장 외신들은 1990년대 말 한국의 IMF 구제금융 경험을 떠올렸다. 다수 외신들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 기업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런 경험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견딜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5월 중순 미국 일부 언론은 서명된 지 3년이 되도록 비준되지 못하고 있는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FTA가 양국의 무역 및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바마 정부가 서둘러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다. 한편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의 상장,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투자 소식도 외신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한국 금모으기 배워야"

*Bloomberg*의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 칼럼니스트는 5월 10일자 칼럼에서 그리스가 한국의 과거 IMF 구제금융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섹 칼럼니스트는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금모으기 운동을 상기시키며, 국가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인구 1천만명의 그리스에서 한국식 금모으기 운동을 기대하기란 어렵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페섹 칼럼니스트는 매를 맞아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맞으라고 충고했다. 한국에서는 구제금융 이후 헛되이 소모된 시간이 없었다며, 부실기업 파산, 은행 폐쇄, 인력 감축 등이 잇따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페섹은 한국의 경제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위기가 계기가 되어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동안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 대해 칭찬 일색만 있는 것은 아니다. 페섹 칼럼니스트는 소수의 거대 재벌 기업들이 경제를 지배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고 있는 점, 지금은 중국과 경쟁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는데도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국이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 더불어 페섹은 지금 세계에는 경제적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국가가 없는데, 한국은 여러 문제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이 역할모델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5월 10일자 기사에서 한국 기업들이 확보한 경쟁력의 기초는 IMF 외환위기 극복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정부가 IMF의 관리 아래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를 서둘렀고, 존속 불가능한 기업은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한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근육질 체질을 갖추게 되면서 이번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美 언론, 한미 FTA 조속 비준 촉구

한미 FTA 비준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찬반 진영의 팽팽한 이견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원 외교안보위원회 존 케리(민주당) 위원장과 이 위원회 소속 리처드 루거 의원(공화당)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바마 정부에 대해 FTA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Washington Post*는 5월 14일자 사설을 통해 FTA 비준을 위한 두 의원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린 현안인데다, 미국이 망설이고 있는 동안 한국이 유럽·중국 등에 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려 하고 있다며 비준 성사를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LA Times*는 5월 14일자 기사에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많은 유권자들이 FTA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 FTA를 지지하는 정치인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기관 감독 개혁을 비롯해 올해 처리해야 하는 다른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 한미 FTA의 연내 비준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수창 삼성생명 대표이사가 '삼성생명' 상장 기념식을 가진 직후 증권정보단말기를 바라보고 있다.

삼성생명 상장과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에 대한 외신 보도도 쏟아졌다. 삼성생명 상장은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의 상장인데다 삼성생명이 앞서 기업공개(IPO)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인 44억달러를 조달했다는 면에서 외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Bloomberg*를 비롯한 외신들은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 열기를 자세히 소개했고, *Wall Street Journal*은 삼성생명의 상장으로 국내 증시 총 시가총액에서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만큼 보험업이 국내 증시의 강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Reuters*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정보공개 및 투자자 감독 기능이 강화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한편 *Business Times*, *Reuters*, *Bloomberg* 등은 올해 26조원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투자계획 발표와 관련해, 이와 같은 대대적인 투자를 감당할 경쟁업체들이 거의 없다며, 삼성전자의 우위가 경쟁업체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 및 애널리스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리 **이성신** KDI 경제뉴스분석팀 책임전문원

'나라 밖 경제'는 해외 주요 경제저널의
유익하고 흥미있는 기사를 소개하는 난입니다.

미궁에 빠진 유로존

'No going back', Economist, May 15th, 2010

EU 재무장관들이 지난 5월 10일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례없는 규모의 구제금융기금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연달아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EU의 금융구제안은 잠시 시간을 벌어 주는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위험요인은 여전히 안고 있다.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유로화 신뢰 회복과 그리스 위기의 글로벌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7,500억유로 지원을 5월 9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사진은 회의에 나선 EU 재무장관들

우선 구제금융기금 운용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구제금융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채권시장 개입에 반대하던 ECB는 최근 태도를 바꿔 유로존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ECB는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예외적 단기 처방에 불과하며 ECB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제금융 시스템 구축이 지연돼 결국 ECB가 방만한 국가경영을 한 유로존 개별국들에 장기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면 ECB는 더 이상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ECB의 독립성 훼손보다 더 큰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더라도 국가파산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마련돼 있다면, 굳이 엄격한 긴축재정 시행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유로존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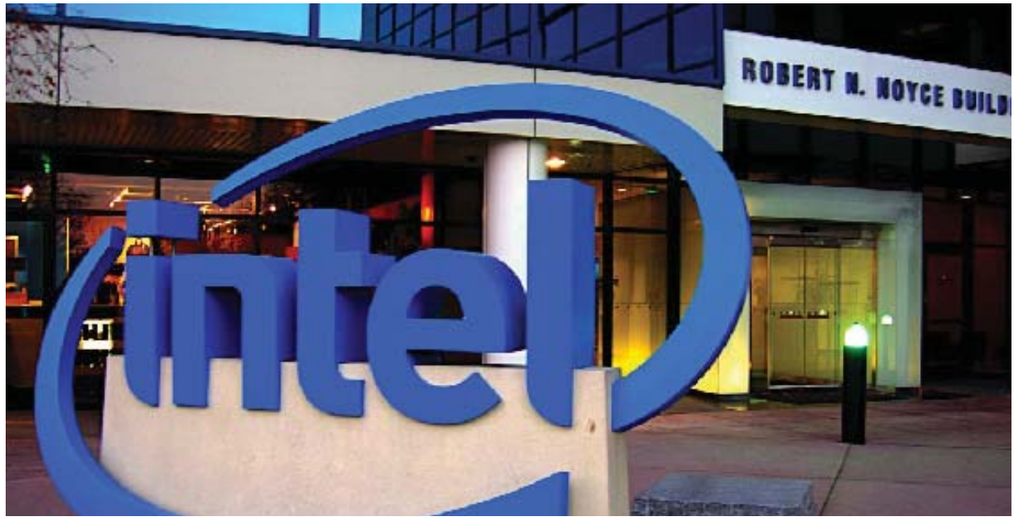
따라서 단체보험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EU는 이제 구제금융기금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유로존은 지금까지 개별 회원국이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도록 규제하는 작업에 실패한 경험이 많다. 당초 유로존 설계자들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를 제한한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과 채무의 상환 책임이 개별 회원국에 있음을 명시한 EU 창설 조약상의 '구제금융 불가'(no bail-out) 조항이 유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사실상 무력해졌다.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은 위반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으나 프랑스·독일을 포함한 많은 회원국들이 협약 내용을 위반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제금융 불가' 조항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 금융시장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재정이 방만한 국가와 건전한 국가가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각국 예산을 편성·확정하기 전에 EU 차원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러한 규제방안들에도 기존 시스템의 결점 중 많은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과제는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유럽 운영 방식을 둘러싼 험악한 정치적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리 **강지은** KDI 경제뉴스분석팀 책임전문원

〈세계는 지금〉은 OECD · WTO 등 국제기구에서 최근 다뤄지는 정책이슈나 동향을 각 부처 파견관들이 생생히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리베이트 규제 놓고 미국 · 유럽 의견차



지난해 5월 EU 산하 유럽위원회는 인텔사에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6월 4일 다국적 기업인 인텔사가 삼성전자 ·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 제조회사에게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리베이트 조건은 인텔사의 경쟁사업자인 AMD사의 CPU를 구매하지 않거나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었다. 2009년 7월 23일에는 CDMA 이동통신 모뎀칩 시장의 독점적 사업자인 미국 퀄컴사가 삼성전자 · 엘지전자 ·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게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사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EoNex(한국) · VIA(대만) 등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기술사용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경쟁당국은 유사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인텔사에 대해 2009년 5월 13일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억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연방 경쟁당국이 인텔사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 관련해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AMD사가 인텔사의 행위에 대해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2009년 11월 13일 인텔사와 AMD사 간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뉴욕주 검찰은 인텔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러한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영업방식에 대한 규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과 해당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각국 경쟁당국은 리베이트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는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OECD 경쟁위원회의 최근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 간 시각 차이를 소개한다.

'충성할인', 시장경쟁에 도움되나

경쟁법에서 말하는 리베이트(rebate)는 고객(소비자 또는 구매기업)의 구매량이 수량 또는 비중 등에서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고객에게 제공되는 보상 또는 할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할인 혜택은 구매한 모든 상품에 대해 적용될 수도 있고, 초과분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리베이트를 '충성할인'(loyalty discount)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뇌물과 관련있는 부정적인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성할인이 보다 중립적인 용어라고 생각돼, 이하에서는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충성할인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에게서도 관찰되는 일반적 현상이며, 보통 경쟁정책이 추구하는 일종의 경쟁적 행위이다. 사실상 할인은 효과적 경쟁의 주요 요소이고 경쟁정책이 촉진하고자 하는 행위의 하나다. 이에 따라 OECD 경쟁위원회 논의에서도 충성할인이 많은 경우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지 않는 일반적 상관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

충성할인은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이익의 일부를 고객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거나, 재고 유지의 필요성 등 수요의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또한 '고객 특유적 매몰 투자'(customer-specific sunk investments)를 보호하거나 촉진할 수도 있다. 고객 특유적 매몰 투자는 해당 고객의 구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충성할인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충성할인은 구매기업, 특히 유통업자에 의한 판촉활동과 광고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할인은 친경쟁적이거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특정 상황에서는 경쟁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할인으로 인해 할인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가 시장으로부터 배제 또는 봉쇄되는 경우, 즉 경쟁사업자의 효율적 규모 달성이 억제되는 등 시장진입 또는 확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달리 말하면 경쟁제한적 배제행위에 해당하는 충성할인은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제약해 종국에는 관련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초래해 경쟁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충성할인으로 인한 경쟁제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할인 기업이 관련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할인 행위가 경쟁기업으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래량에 충분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공격적인 친경쟁적 할인과 경쟁제한적 배제행위를 구분하는 데 있다. 참고로 카르텔과 같은 수평적·협조적 경쟁제한행위는 가격인상, 산출량 감소 등 경쟁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쟁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직접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위법성 판단이 쉽다. 반면 충성할인과 같은 배제적 행위는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이고 경쟁제한성과 효율성이 혼재돼 있는 경우도 있어 위법성 판단이 쉽지 않다.

특정 충성할인 행위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 충성할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그렇지만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약탈적 가격책정(predatory pricing)에 대한 접근법에 따라 가격-비용 테스트를 기반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비용 이하로 가격을 설정하고 향후 이에 따른 손실을 독점적 가격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위법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미국 경쟁당국은 할인 후의 가격을 비용과 비교해 가격이 비용보다 높은 경우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가격이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안전항에 해당하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퀄컴사의 조건부 리베이트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 시장개입 축소 vs 유럽, 규제범위 폭넓게 인정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미국 경쟁당국의 수장(Ms. Varney)이 부시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철회하는 등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긴 했으나 미국이 충성할인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해 급격하게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은 약탈적 가격책정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충성할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들은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또는 전속거래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충성할인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즉,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충성할인이 고객을 할인기업에 고착화시키고, 경쟁기업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배제 또는 봉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다. 배타적 거래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는 경우 약탈적 가격에 해당하는 충성할인뿐만 아니라 가격이 비용 이상인 경우에도 경쟁제한적 배제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할인행위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실제로 영국 항공(BA)이 항공권 판매실적 등에 따라 여행사에 제공한 충성할인과 관련해 미국 법원은 BA의 충성할인 시스템이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를 초래하지만 소비자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반면 유럽 경쟁당국은 경쟁 항공사를 배제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9년 BA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간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 기업결합 신고기준 등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로 국제적 수렴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충성할인을 포함,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OECD 경쟁위원회와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등 경쟁에 관한 국제적 포럼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 충성할인의 경쟁제한성 또는 위법성 판단 등 실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 간에 여전히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견 기업·시장과 국가의 기능에 대한 신념, 시장의 크기, 역사와 문화 등 매우 근본적 요인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충성할인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미국과 유럽 간의 시각 차이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크게 좁혀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라경제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주OECD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윤수현
주OECD대표부 참사관
shyoon07@mofat.go.kr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 과감히 걷어내야

때 _ 2010년 5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곳 _ KDI 회의실
진행자 _ 고영선 KDI 재정 · 사회정책연구부장
참석자 _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고영선 : 공기업은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생산주체로서의 기업으로 정부의 정책사업 등을 시장계약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여러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기업 부채다. 부채가 급증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박정수 : 중앙정부 부채는 2005년 GDP 대비 27.6%에서 2009년 32.6%로 5%p 증가했다. 지방정부 순부채는 같은 기간 1.1%에서 1.3%로 0.2%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로, 2005년 GDP 대비 11.5%에서 2009년 20.1%로 8.6%p나 증가해 중앙 · 지방정부에 비해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나 재정위기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올 정도는 아니다. 실물자산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공공요금 인상이나 자산 매각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자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 것들은 건전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 시장에 상장돼 있으면, 결국 주주들의 지분만큼만 걱정하면 된다. 물론 실물자산의 증가 없이 증가하는 부채도 있고, 자산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안종범 : 공기업 부채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로 최근 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2009년 현재 결산기준으로 공기업의 총자산은 352조원이고 총부채는 213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총부채 중 준시장형 공기업 부채는 149조3천억원(70.4%), 시장형 공기업 부채는 62조7천억원(20.6%)인데, 문제는 자체수입액이 낮은 준시장형 공기업의 부채가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부채 급증은 향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박정수 : 286개 공기업을 모두 더해서 부채 수준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금 중복 문제나 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하게 더하기만 한 부채 규모는 신뢰성 없는 데이터에 불과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더욱이 기관별 부채 증가의 원인은 상이하므로 모든 공기업 부채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고영선 : 그러면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어디에 있나? 또한 그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이며, 공기업 자체의 책임은 어떠한가?

안종범 : 선진국 공기업과는 달리 우리 공기업은 정부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사실상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 도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 공기업의 파산 위험은 거의 없다. 결국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채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재의 요금이 계속 누적돼 생기는 부채다. 특히 공공요금은 원가보다 낮게 공급되니 수익성이 높을 수 없는 구조다.

박정수 :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상위 4개 기관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들 4개 기관이 공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다. 전력 · 도로 · 가스공사의요금규제, LH공사의 임대사업과 택지개발 등에 소요되는 금융성 부채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고영선 : 공공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같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공공요금 현실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안종범 :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와 수도 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데 반해 이용률은 최고 수준이다. 전기와 물을 너무나 싸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자원의 낭비가 매우 심하다. 예를 들어 욕조에 가득 물을 담았을 때 우리나라는 350원 정도 든다고 하면, 독일은 우리보다 다섯 배 정도가 더 든다고 한다. 자원 배분의 심각한 왜곡 현상이 서민들을 위한 낮은 공공요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만연하고 있다. 공기업의 재무상황을 보다 자세히 공개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공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면서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

박정수 : 현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가스공사의 공공요

안종범 교수

> 경영평가 시스템도 방만 경영에 한몫하고 있다. 현재는 전년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데, 이것은 공기업 자체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바꿔야 할 때다.

금은 총괄원가 보상률이 100%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고 사업 수익성도 개선해야 한다.

안종범 : 낮은 가격으로 제공했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많은 국민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공공요금을 인상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국민의 부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낮은 가격에 제공되는 공공요금의 혜택과 세금의 부담을 비교해서 생각해야 한다.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고, 기업이다.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인상분만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고영선 : 공공요금 현실화는 국민경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한 공기업의 재무적인 책임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이러한 부채 외에 공기업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안종범 : 공기업의 임금체계와 인사도 문제다. 특히 경영진과 관련된 대리인 비용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민간 부문보다 대리인(공공 부문의 노사)이 주인(국민)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고려해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비효율과 불공정이 지속될 여지가 많은 시스템이다.

박정수 : 공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경영평가 같은 외부 감시 강화 등을 통해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과다한 임금 · 복리후생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영선 : 방만경영 문제도 짚어봤으면 한다.

안종범 : 공기업 사업은 정부정책을 대행하는 것이 많다. 임금피크제, 선택적 복지제도, 잡세어링, 청년 인턴제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먼저 공기업이 대부분 시작해 본다. 이렇게 했을 때 공기업 방만경영의 귀책 사유는 정부에 있기 때문에 떠넘기기가 좋다. 경영평가 시스템도 방만경영에 한몫하고 있다. 현재는 전년대비 실적을 평가하는데, 이것은 공기업 자체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바꿔야 할 때가 왔다.

박정수 : 2002년 이후 35개 대형공공기관의 인건비 증가율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 제고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하나하나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키워주고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쪽으로 가야 한다. 복잡한 평가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민영화할 부분은 민영화하고 구조조정할 부분은 구조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 끌고 가는 선진화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계도 있다. 현재는 모든 공기업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데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크다. 차별화해서 핵심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박정수 소장

> 현재는 공기업들의 사업 내역 · 재무구조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 상장회사 수준의 정보 공개를 공기업에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훨씬 단순화한 지표가 필요하다. 타율적 · 획일적 잣대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맞춤형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다. 여러 개를 담으려고 하면 결국 하나도 담을 수 없다. 평가를 위한 평가는 더 이상 안된다.

고영선 :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공기업의 특성상 고치기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

안종범 :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상황이라 보기는 어렵다. 영국 쉐필드대학교 프라인더스(M. Flinders) 교수는 "공공기관으로 있으면 정부 규모와 범위를 작게 보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요구되는 민주적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은 스스로 몸집을 불리는 속성을 보유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공기업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다만 우리 공기업은 선진국들과는 달리 정부사업 대행 및 요금규제에 따른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분만큼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리기 어렵다.

박정수 :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의 문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 공기업의 기본적인 속성 때문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공기업이 설립된 한국적 특성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고영선 :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안종범 :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공기업 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모니터링 강화 및 대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우선 공기업 부채 중에서 정부사업 대행으로 발생한 부분이 얼마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통상적 기업활동 이외에 수행하는 정책적 임무를 가능한 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정부 부채에 공기업 부채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만들어 귀책사유를 분리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으로써 공기업의 재무적 책임과 효율성 제고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공기업 스스로의 재무건전성을 키울 수 있으며 정부 사업의 공기업 대행 등도 해결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수준 및 상환부담 등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무건전성 및 사업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통화지표처럼 유형별 부채도 지표를 개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박정수 : 기관별 특성에 맞는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의 선진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공기업들의 사업내역 · 재무구조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 상장회사 수준의 정보공개를 공기업에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부채관리를 위한 방안이 정부와 공기업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고영선 부장

> 공공요금 현실화는 국민경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한 공기업의 재무적인 책임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안종범 :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경영에 책임지거나 감독할 만한 명확한 주인이 존재하지 않고, 시장에서의 경쟁압력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사업의 비효율성과 공기업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걷어내야 한다. 공기업 인원감축의 문제도 이슈다. 필요할 수도 있으나 현재 경제상황에서 인원감축이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공기업의 임금 수준을 생산성 수준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리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특별 기고

국가경쟁력 순위 23위, 역대 최고 기록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쟁력전략팀장
s8096@mosf.go.kr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발표된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99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 순위인 2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한 것으로 올해 순위가 10단계나 하락한 일본(27위)을 사상 처음 추월했다.

기업의 경쟁범위, 이젠 세계

최근 국가경쟁력이 중요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세계화의 진전이다. 기업의 경쟁범위가 세계시장으로 확대되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즉, 각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들 수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지속적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경영개발원의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 4대 부문에 대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부문에서 순위가 개선됐다. 특히 경제성과 부문(45→21위)과 정부 효율성 부문(36→26위)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경쟁력 순위/58개국	31	27	32	29	31	27	23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순위	11	9	11	10	11	10	8
인구2천만명이상 국가 중 순위	14	10	14	12	13	11	9
G20 국가 중 순위						8	7

〈표 2〉 4대 부문별 순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과	41	38	36	49	47	45	21
정부 효율성	32	28	41	31	37	36	26
기업 효율성	25	27	38	38	36	29	27
인프라 구축	24	20	22	19	21	20	20

20대 세부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등과 같은 국내경제(10위), 평균 실업률, 장기 실업률 등과 같은 고용(4위), 재정정책(13위)과 과학 · 기술 인프라 분야(각각 4위, 18위)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50위), 기업관련 규제(44위), 사회 인프라(49위) 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올해 평가에서는 세계적 현안인 정부 부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국민소득 대비 33%(2009년 기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do not have a debt problem"). 반면에 높은 정부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 · 이탈리아 등은 각각 2080년, 2064년이 돼야 정부 부채를 국민소득 대비 60% 미만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녹색산업 육성 시급

국제경영개발원의 평가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실시해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둘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먼저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교육이 사회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요구된다. 또한 답보 상태에 있는 보건과 환경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와 녹색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문화개방성(52위), 노사관계(56위), 중소기업의 효율성(52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경제

국제경영개발원이 제시한 2010년 정책과제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 개혁
- 더블 딥(Double-dip)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함께 고려한 출구전략
- 소득 · 지역 격차 완화
-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

〈그림〉 20대 항목별 경쟁력 지형도

* '김 대리의 환경노트'는 필자가 환경부에 근무하면서 느낀 일상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낸 에세이다.

도심 속 골드러시 '도시 광업'

전국에 매장을 갖고 있는 대형할인점에 근무하는 김 대리. 자신이 속한 환경경영전략팀의 유 부장에게 폐휴대전화 수거 행사를 건의했다. "휴대전화 한 대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과 같은 귀금속을 시세로 환산하면 3천원이 넘는답니다. 우리가 이런 '도시 광업'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전국 매장에서 폐휴대전화 수거 행사를 벌이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겁니다." "도시 광업? 도시에서 광물을 채취한다는 이야기네." 유 부장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광산이 아닌 도시에서 금·은 등을 캐내는 도시 광업은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한 연구기관은 일본 내 폐전자제품에 들어 있는 금의 양이 총 6,8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최다 금 매장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2%가 많은 세계 금 매장량의 16%에 해당한다고 해요." 김 대리의 말에 유 부장도 입이 벌어졌다.

"시가로 따지면 22조엔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김 대리가 이어서 말했다.

"휴대전화에는 귀금속도 있지만 납 등 유해 물질이 들어 있어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켜요.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전화가 가구당 1.5개 정도는 된다는데, '장롱폰'을 모아 수익금을 자선단체나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병행하면 좋겠어요." 서진주 대리가 거들었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세계에서 으뜸이고, 최신 기능과 유행을 좇아 일 년에 한 차례씩 전화기를 바꾸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외환위기 시절 장롱 속 금을 꺼내 모으던 정성으로 서랍 속에서 잠자는 전화기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면 상당한 양의 자원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누가 한국을 자원 빈국이라 하겠는가? 도시의 골드러시군.' 유 부장은 김 대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폐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폐건전지도 수거 행사를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김 대리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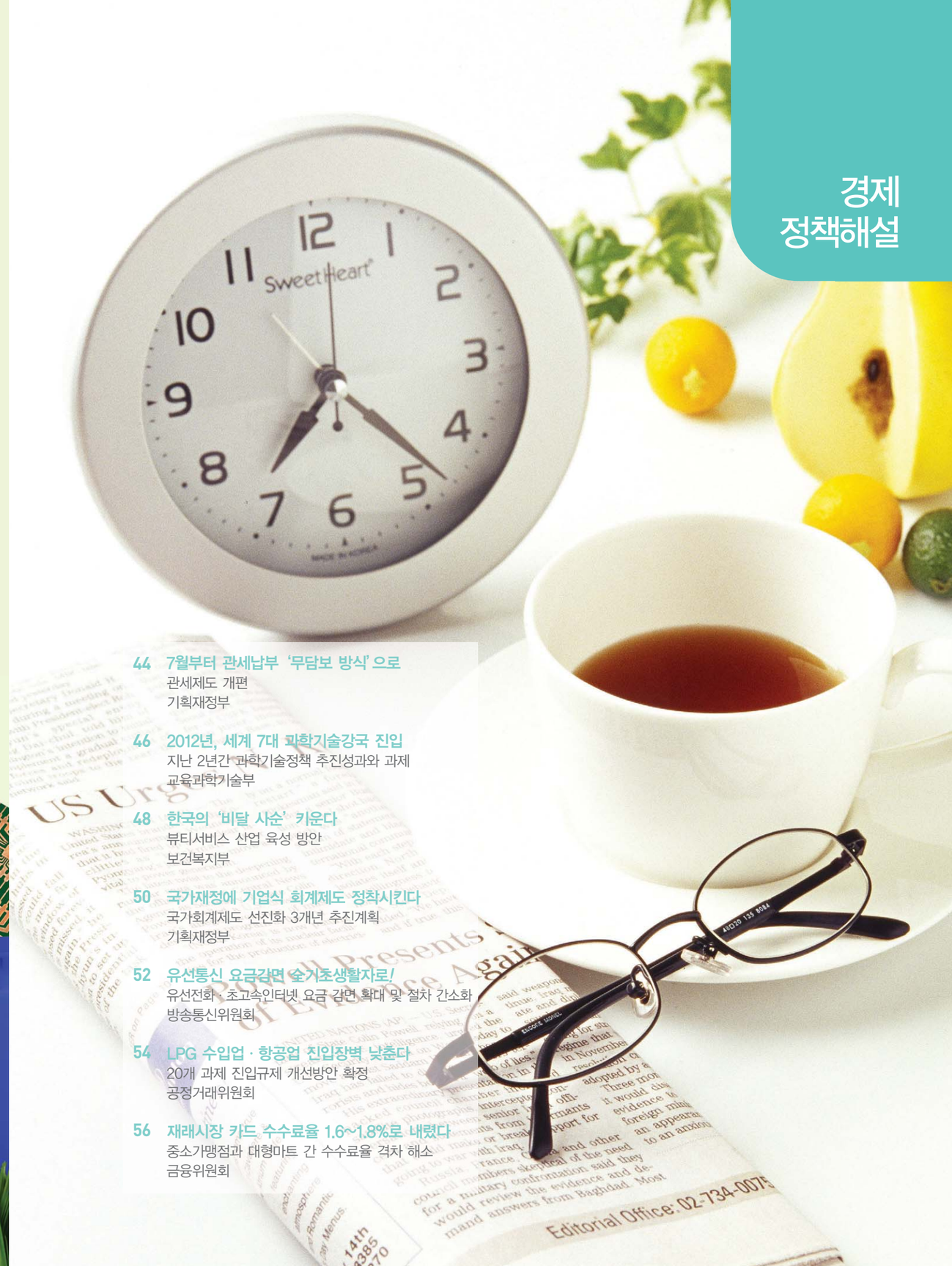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은 지난번 전국 매장에서 벌여 좋은 반응을 보였던 이벤트니 함께해도 좋을 듯합니다." 유 부장은 김 대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김 대리는 아이디어도 많고 추진력도 좋아. 우리 팀의 보배야.' 유 부장은 좋은 의견을 내준 김 대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래경제

도시 광업

'도시광업'(Urban Mining)이란 안 쓰는 휴대전화와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금·은과 같은 고가금속이나 팔라듐·인듐 같은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이다. 광산의 금광석 1톤에선 5g의 금을 추출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1톤에선 400g, PVC 1톤에선 52g, 가전제품 1톤에선 20g의 금을 얻을 수 있다. 휴대전화 한 대에서 추출할 수 있는 희귀금속을 현 시세로 환산하면 3,540원 정도다. 한 해에 폐기되는 휴대전화는 약 1,400만대 수준이며 모두 재활용하면 연간 약 500억원의 자원을 추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재활용을 위해 회수된 휴대전화는 2008년 420만대에 그쳤다. 안 쓰는 휴대전화로 집에 방치돼 있는 '장롱폰'이 84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복환 환경부 감사관
연세대, 캠브리지대 박사(경제정책 전공).
기획재정부에서 환경정책 등 주요 경제사회정책 기획과 조정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내 첫 스토리텔링 환경경영 이야기책인 「그린 이즈 머니」(Green is money)를 썼다.
bhyu7@hanmail.net



경제 정책해설

44 **7월부터 관세납부 '무담보 방식'으로**
관세제도 개편
기획재정부

46 **2012년, 세계 7대 과학기술강국 진입**
지난 2년간 과학기술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48 **한국의 '비달 사순' 키운다**
뷰티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보건복지부

50 **국가재정에 기업식 회계제도 정착시킨다**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52 **유선통신 요금감면 '숨기초생활자로!'**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방송통신위원회

54 **LPG 수입업·항공업 진입장벽 낮춘다**
20개 과제 진입규제 개선방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56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율 1.6~1.8%로 내렸다**
중소가맹점과 대형마트 간 수수료율 격차 해소
금융위원회

7월부터 관세납부 '무담보 방식'으로

관세제도 개편

정부는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을 개정했다.
사진은 우리나라 수출입 관문인 부산항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국민계정'(잠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9년 대외의존도[(수출액+수입액)/GDP]는 2008년 92.1%에서 크게 하락한 82.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높은 원자재가격 및 환율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2008년에 대비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2007년 69.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EU 등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부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통관·납세·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최근 관세법령을 개정·시행했다. 올해 1월 1일 공포된 「관세법」 개정을 필두로 3월 26일 「관세법」 시행령, 3월 30일 「관세법」 시행규칙과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등이 차례로 개정됐다.

중소 수출기업 환급절차 간소화해

우선, 올해 7월 1일부터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종전에는 수입신고 시 담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입하는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 수입업체 등이 수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 등 담보물 자체뿐 아니라 담보설정으로 인한 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따른 수입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무담보 통관체제를 구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체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원칙과 예외를 바꿔 규정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는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자, 최초로 수입하는 자, 파산·청산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이다.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 높여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간이정액환급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환급제도는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입 관계서류 및 사용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서 등을 갖춰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중소기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단순히 수출 사실만을 확인해 환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간이정액환급제도다. 종전에는 환급을 신청하기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만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이나 환급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간편하게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납부 범위가 확대되는 등 관세납부 편의성도 제고된다. 종전에는 납부할 세액이 수입신고 건당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건당 500만원 이하인 세액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정부는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신고 시 원칙적 무담보제도 도입, 중소 수출기업 환급절차 간소화, 신용카드 관세납부 등 납세편의 제고, 최소부과원칙과 제로잉 금지원칙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최근 관세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납세자의 91.2%, 법인납세자의 70.6%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어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는 총 관세징수액의 0.2%에 불과해 이용실적이 저조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다 실질적 제도로 정착될 전망이다.

덤핑제도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선진화된다. 반덤핑조치는 상계조치와 세이프가드 등 다른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다. WTO회원국은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08년까지 평균 매년 245건의 반덤핑조사를 시행한 반면, 상계관세조사는 15건, 세이프가드는 6건에 그친다. 이는 개도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제도 이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조치에 비해 비교적 조사개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덤핑조치는 세계무역 원활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보호무역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반덤핑조치 보장을 위한 방법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소부과원칙과 제로잉(zeroing) 금지원칙이다.

최소부과원칙은 덤핑률과 국내 산업피해 구제율 중 낮은 수준에 맞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원칙이다. 국내 산업피해 회복이라는 덤핑제도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제로잉이란 덤핑가격을 구하기 위해 개별 수출가격을 가중평균할 때 정상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출한 거래의 덤핑차액을 '0'으로 환산해 결국 최종 덤핑률이 높게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WTO에서도 금지판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실무적으로 이 두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 왔으나 관계법령으로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관세법령 개정으로 두 가지 원칙 모두 우리 법령으로 수용됨에 따라 향후 국제협상 등에서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출전선에서 치열한 무한경쟁에 직면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통관제도 선진화와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사무관
asteroid@mosf.go.kr

2012년, 세계 7대 과학기술강국 진입

지난 2년간 과학기술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2008년 8월 과학기술 분야의 청사진으로 '과학기술 기본계획'(577전략)을 수립했다. '577전략'은 2012년까지 총 R&D 투자를 5%로 확대, 7대 중점 R&D 분야 집중 육성 및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2012년까지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등을 목표로 90개 정책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 R&D투자 확대, 융합·녹색기술 개발 강화, R&D시스템 선진화 등의 다각적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R&D 투자 13조7천억원

정부는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2010년 정부 R&D 예산을 2008년 11조1천억원에서 23.4% 증가한 13조7천억원으로 확대했다. 2009년도에는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R&D 분야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을 제공했다.

민간 부문의 경우, 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 R&D 투자가 다소 위축됐으나 회복 추세에 있다. 특히 정부는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부설(연) 육성, 조세지원 강화, 중소기업 R&D 자금·인력 지원 확대, R&D 서비스업 육성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90개 중점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핵심 인재의 양성·확보, 연구주체의 핵심역량 제고, 개방형 R&D 체제 강화 등 7대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에도 노력을 집중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2009.1월)을 수립해 27대 중점녹색기술을 발굴하고,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2008년 1조원에서 2010년 1조7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2009.1월)을 수립해 약 700조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2010년 1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또한 세계 수준의 대학 및 연구센터 사업을 통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공동연구 활성화, 연구관리기관 통폐합(15개→4개) 및 R&D 관리체계 개선, 기초·원천연구사업의 구조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조정 기능의 실질적 강화 등 과학기술 시스템 선진화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기반 확충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우선 성과지표면에서 살펴보면 과학경쟁력은 2007년도 7위에서 2009년도 3위로 4계단 뛰어올랐으며,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도 2007년도 0.43에서 2008년도 0.45로 향상됐다. 이와 함께 핵융합장치(KSTAR) 건설 및 플라즈마 발생 성공(2008.6),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2009.7), 나로호 발사(2009.8), 연구용원자로 수출 계약 체결(2010.3),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2009.6) 및 제2남극기지 건설지 선정(2010.3) 등 다수의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거뒀다.

지난 2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기술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012년까지 민간의 R&D투자가 연평균 약 15%까지 확대(GDP 성장률 4~5% 가정)되도록 R&D 투자 세액제도 영구화 및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D투자 확대 위해 세액공제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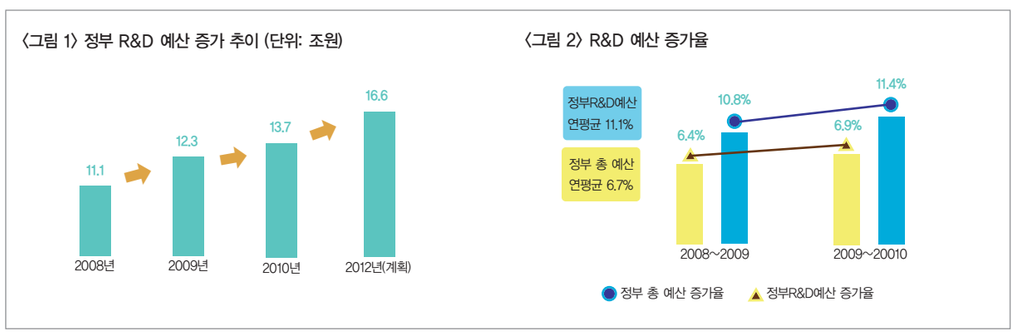
첫째, 국가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총 R&D 투자의 75% 이상을 점유하는 민간 부문의 R&D 활성화가 절실하다. 정부는 2012년까지 민간의 R&D투자가 연평균 약 15%까지 확대(GDP 성장률 4~5% 가정)되도록 R&D 투자 세액제도 영구화 및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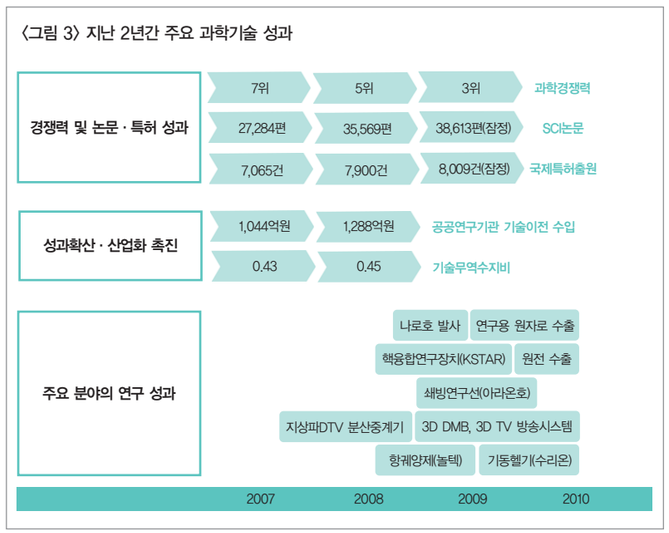
둘째, 국가 R&D 투자를 효율화할 것이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R&D 연구성과 확산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실패제도 도입으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충한다.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탄소시장, 금융 등 법·제도를 구축해 신시장 창출에 앞장서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고용확대정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 과학기술을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한다. 이를 위해 우리 주도의 국제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개도국과의 협력지원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형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2012년에는 세계 7대 과학기술강국 진입을 실현할 것이다. 또한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6월 2040년을 향한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수립·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을 조속히 착수하여 글로벌 R&D 허브로 육성할 것이다.





박필환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과장
pph@mest.go.kr

한국의 '비달 사순' 키운다

뷰티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한국의 미용 기술은 아시아권에서 최고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의 21.2%가 한국 미용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명동의 한 화장품 전문점

뷰티서비스는 고급기술을 가진 인적자원 양성이 성패의 핵심이다. 올해 정부는 뷰티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을 위해 전국 6개 대학에 뷰티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총 72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국의 '비달 사순'을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근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뷰티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2008년 헤어·피부관리·네일·메이크업 등 뷰티서비스 분야의 시장규모는 약 9조9천억원, 종사자 수는 약 35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매년 평균 10% 이상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드라마·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수출된 국가의 경우 우리 배우의 헤어스타일이나 화장법이 최신 유행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피부 관리 등 뷰티서비스를 점차 필수 관광코스로 여기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뷰티산업, 연평균 10% 이상 고속성장

주요 국가들도 뷰티서비스 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뷰티서비스 산업을 자동차·관광 등과 함께 '급성장하는 중국의 5대산업'중 하나로 지정하고 매년 1백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도 뷰티서비스 산업을 레저·관광산업 등과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4개 직업군의 하나로 분류해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호주는 뷰티서비스 산업 등 14개 핵심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Service Skills Australia'라는 조직을 전액 정부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뷰티서비스가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규제 중심의 공중위생 틀을 벗어나지 못해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 이 부문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뷰티서비스 산업은 전체 97% 이상이 4인 이하 업소이고, 2008년 기준 매출액이 전체 서비스업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인 4,481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 영세사업자 중심의 구조를 띠게 됐다. 가맹점 형태로 50개 브랜드, 1,600여개 업소가 운영 중이지만 이러한 가맹점은 아직 전체업소의 2% 수준에 불과해 대형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뷰티서비스 산업화의 핵심인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아직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변변한 교육기관 하나 없다.

이에 정부는 2010년을 뷰티서비스 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고, 산업화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체계적 정책지원을 담당할 '뷰티산업 선진화지원센터'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소했다.

정부는 우선 뷰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현재 규제 중심의 제도를 산업화 지원 체계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새로운 요구와 시장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영세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초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5인 이상 미용업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영세사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만들었다.

전국 6개 대학 뷰티아카데미 신설

뷰티서비스의 경우 고급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 양성이 산업화 성패의 핵심이며, 그만큼 재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올해 정부는 뷰티서비스 산업 종사자 재교육을 위해 전국 6개 대학에 뷰티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총 72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향후 개설지역을 전국 시·도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대폭 늘려 한국의 '비달 사순'을 양성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교육을 직접 받지 못하는 종사자들에게는 오는 9월부터 온라인 교육 과정(www.beautyacademy.or.kr)을 통해 최신기술 강좌, 창업 지원, 미용영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뷰티서비스 산업과 화장품 산업, 의료서비스 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방안, 고수익 관광상품으로의 육성방안, 우리 업체의 해외진출 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뷰티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산업규모 20조원을 달성하고 4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뷰티서비스는 모든 서비스가 사람의 손을 통해 제공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손기술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현실에 맞는 법제도와 제대로 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단기간 내에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표〉 뷰티서비스 산업 현황

	업소 수	종사자 수	시장 규모
헤어미용	82,551개	248,310명	약 6조원
피부미용	17,979개	53,936명	약 1조7천억원
메이크업	14,544개	37,300명	약 1조8천억원
네일미용	3,715개	15,062명	약 3,700억원
계	118,789개	354,608명	약 9조9천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뷰티 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2009)

조귀훈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
kimsybest@korea.kr

국가재정에 기업식 회계제도 정착시킨다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

정부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 전 부문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인력 전문성 제고,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 주요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국가재정 전 부문에 민간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추가하여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등 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며, 국가통합재무제표는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 전 부문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인력 전문성 제고,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 주요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을 지난 3월 마련했다.

도로·댐 등 SOC 가격평가 실시

국가회계 운영시스템은 중앙관서 및 국가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과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유용한 재정정보를 국민 등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정부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운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국가 자산·부채의 재무제표 계상을 위한 실사·평가 및 회계처리 방안을 마무리하고, 다양한 재정분석 기법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다.

첫째, 도로·댐·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2010년 완료하고, 2011년에 가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국가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재정운영표의 원가왜곡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연금 등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을 외부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고자 한다. 연금 등 미래지급의무에 대비하기 위해 계상해야 하는 충당부채의 회계처리방법은 2010년 하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부방안을 정하고, 2011년 상반기 중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셋째, 2009회계연도부터 작성된 발생주의 기준 재무제표를 토대로 국가회계와 관련되는 재정분석지표를 마련한다. 2010년 하반기에 2009년 결산보고서상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등에 대해 분석 및 검토를 실시하고, 2011년 하반기에는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로드맵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인력 전문성 제고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2010년	· 사회기반시설 실사 ·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검토	· 회계직 공무원 직렬신설을 위한 법·제도 정비 · '회계결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 재무제표 사전검증 제도 도입방안 검토 ·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정부 회계내용 반영 추진
2011년	·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개발 ·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 ·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마련	· 회계담당 공무원의 능력 제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 재무제표 사전검증 제도 마련 · 국가회계 전문자격인증제도 도입
2012년	·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 회계직렬 공무원 선발	· 회계사 시험과목에 정부 회계내용 반영 · 회계법인에 대한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제도 도입지속
지속추진과제	· 중앙부처, 전문가, 언론·국민 등에 대한 국가회계 홍보 강화 · 회계담당 공무원의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 실시		

국가회계인력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운영시스템을 차질 없이 작동하고, 국가회계 운영시스템에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고 관리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회계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첫째, 2010년부터 각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국가회계결산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회계결산지원단의 향후 운영계획은 각 중앙관서 전문인력 충원 등 회계·결산 조직체계 정비와 연계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가공무원 임용 시 국가회계 업무를 전담할 '회계직 공무원 직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2012년부터 6~9급 공무원 신규 채용 시 회계직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할 예정이다.

셋째, 회계·결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 2010년부터 회계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교육대상별 업무특성 및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한다.

넷째, 회계·결산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증가 및 추가 업무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2011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기관에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국가회계 인프라는 민간 회계전문가 등 정부 외부에서 국가회계제도가 재정 부문에 원활하게 작동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 운영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정부는 국가재정에 도입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회계제도 인프라를 다각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 2010년 상반기에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설치되고 하반기에는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회계기준센터가 국가회계 인프라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가회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재무제표 사전 검증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한다. 정부는 각 중앙관서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민간 회계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해 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셋째,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도 국가 및 지자체 회계를 포괄하는 정부회계 내용을 2012년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 국가회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나고,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크게 늘어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인적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2012년에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해 재무제표 사전검증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회계법인의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부처, 국가기관, 전문가 및 언론·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학 전문가 등 학계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조화롭게 병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나라경제

박성동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장
parksd@mosf.go.kr

유선통신 요금감면 全기초생활자로!

유선전화 · 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선통신 3사는 저소득층의 시내 · 외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종전의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키로 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도시근로 기준 소득하위 10% 가구의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9.5%로 소득상위 10% 가구(1.9%)보다 5배 높아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가계 통신비 중 이동전화가 6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유선통신 감면, 이동전화보다 상대적으로 소홀

이에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을 기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의 일부까지 확대했다. 제도시행 이전인 2008년 9월과 1년 후인 2009년 9월을 비교했을 때, 감면대상자는 15만명에서 75만명으로 약 5배, 감면금액은 119억원에서 1,058억원으로 약 9배 정도 증가했다. 다만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센터(읍 · 면 ·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했다. 또 1년마다 같은 절차로 서류를 다시 내야 하는 등 감면 신청 절차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전화 요금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시스템'을 지난해 8월 개통, 감면대상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감면신청을 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동전화와 함께 가계통신의 필수재로 여겨지는 유선통신(전화 · 인터넷)의 요금감면 정책은 이동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져 왔다. 그에 따라 이동전화요금 감면 절차간소화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들 무렵인 지난해 9월부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감면 절차 간소화를 위해 대상사업자 및 서비스를 확정하고 통신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서비스 구축을 위한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과정에서 저소득층 중 유선통신 감면대상이 미성년자 · 고령자 등에 한정돼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 필요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 대상이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기초생활수급자의 상당수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의 실효성 있는 감면정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통신사와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추진과 병행해 2010년도 상반기 중 저소득층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 대상을 기존의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대상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면대상 확대 정책 추진을 유선통신 3사에 공식 제안했다.

유선통신사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에 동의했고, 자발적 정책 개선 의사를 밝혀 요금감면 개선 계획이 탄력을 받았다. 올 2월에는 당초 상반기 중 개통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던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절차간소화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제도 개선 정책'을 통신사업자의 협조에 힘입어 약 2개월 단축된 4월 1일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후 시스템 연계를 위한 개발과 관련 규정 개정, 시범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드디어 지난 4월 1일, 약 6개월간의 논의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선통신 3사(KT,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저소득층의 유선통신(시내 · 외전화, 초고속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종전의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표〉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전후비교

	현행	확대시
대상 서비스	시내전화, 시외전화, 114번호 안내, 초고속인터넷	좌동
요금감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대상자 수	약 73만명 (2009년 말)	약 157만명 (약 2.1배 확대)

서류제출 없애 신청절차 간소화

협의과정에서 유선통신 3사는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해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에 반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소외계층의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및 절차간소화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행정안전부 및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진 결과 6개월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감면 절차 간소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를 최종 공표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에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간소화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유선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또는 전화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유선통신 이용요금 절차간소화시스템 구축으로 392만명(기초생활수급자 157만명, 장애인 224만명, 국가유공자 11만명)에 달하는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서민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경

유인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
sodoman@kcc.go.kr

LPG수입업 · 항공업 진입장벽 낮춘다

20개 과제 진입규제 개선방안 확정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는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경제적 규제 2,179건 중 35%인 768건이 진입규제이며 주로 의료복지 · 환경 · 물류운송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진입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한다. 또한 유망한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참고로, 신규기업의 진입률(필자 주: 전체 기업들 가운데 신규로 창업한 기업의 비율. t년도의 신규기업 진입률 = t년 창업한 기업수/t년 전체 기업수)은 2002년 20.6%에서 2008년 12.2%로 낮아졌고, 고용창출률(필자 주: 총 고용자 가운데 신규 기업에 고용된 종사자의 비율. t년도의 고용창출률 = t년 신규기업 고용자수 / t년 전체 고용자수) 역시 2002년 13.7%에서 2008년 7.6%로 크게 떨어졌다.

〈그림〉 2002년 이후 신규기업 진입률 및 고용창출률 추이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경제규제의 35%가 진입규제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진입규제를 정비해 경쟁촉진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렌트(독점이윤)가 제거되고, 경쟁압력이 높아져 창의와 혁신이 제고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KDI 연구결과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총요소생산성 향상으로 잠재성장률이 0.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없는 성장으로 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진입규제가 개선되면 산업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2009년 KIET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10% 줄이면 일자리 7만5천개가 창출된다고 한다. 진입규제 정비가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1단계로 지난해 9월 개선이 시급한 26개 진입규제 개선과제를 우선 추진한 데 이어 지난 4월 28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2단계로 서비스 분야와 공적 독점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의 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진입규제 개선작업은 진입규제를 완화해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해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과제다. 첫째, LPG ·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를 위해 사업자 간 저장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장시설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둘째,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현재 허가받은 시 · 도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소비자 선택권 제약 및 사업자 간 가격담합 조장으로 LPG를 주로 사용하는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LPG 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LPG 판매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대 10% 인하돼, 400억원의 소비자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객이 선호하는 항공기 이착륙 시간(슬롯, Slot)을 확보하는 것이 항공사 경쟁력의 관건인 점을 고려해 신생 저가항공사가 슬롯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스케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넷째,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독점이익을 완화하고 출하자와 소비자 이익을 높이기 위해 정산법인을 설립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전속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전국단위 평가제를 권역(시장)별 평가제도로 전환해 부실도매시장법인의 퇴출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경비업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시설 · 기계 등(1억원 → 5천만원), 특수(5억원 → 3억원))하고 교육장 구비요건을 폐지했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위한 객실기준을 완화(50실 → 30실)하는 등 총 13개 과제를 개선했다.

정밀안전진단 등 공기업 독점 분야 민간에 개방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주요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독점 수행하고 있는 것을 2015년까지 60개 시설물에 대해 점진적으로 민간에 확대 개방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정밀안전 지식 · 기술 발달 및 진단비용 인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 ray 등) 및 방사선 방어시설(촬영실)의 안전검사업무를 5개 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육군 제2879부대) 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해 소비자들이 검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검사수수료 인하가 가능해졌다.

셋째, 환경성적표지 인증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독점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 · 민간 연구소 등에 개방하고, 기업이 환경성 정보를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이 검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해 저탄소 녹색소비가 촉진되도록 했다. 이 외에 농업기계화사업 위탁범위 제한규정을 삭제해 민간의 참여를 가능토록 하는 등 총 7개 과제를 개선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진입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1 · 2단계에서 확정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 나래

진입장벽 완화로 신생 저가항공사의 스케줄협의회 참여가 가능해져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저렴한 항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김포-제주 구간 탑승률 1위를 차지한 이스타항공

진입규제 개선작업은 진입규제를 완화해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해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pjk@korea.kr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율 1.6~1.8%로 내렸다

중소가맹점과 대형마트 간 수수료율 격차 해소

재래시장가맹점, 중소가맹점의 연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효과는 2010년도 기준 약 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서울 경동시장

최근 3월 말에서 4월 중순에 걸쳐 각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들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경기침체,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어려운 사업 여건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전국 1,500여개 재래시장(전통시장)내에 있는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간 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에 대해 현재 2.0~2.2%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1.6~1.8%로 인하하고,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재 신용카드사별 최대 3.3~3.6%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2.0~2.15%로 내렸다. 다만 유흥주점 · 무도장 · 성인오락실 · 귀금속점 등 영세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신용카드 가맹점은 제외됐다.

이번 인하로 재래시장가맹점, 중소가맹점과 대형마트 · 백화점 간 수수료율 격차가 해소됐다. 재래시장가맹점, 중소가맹점의 연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효과는 2010년도 기준 약 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4월부터는 금융감독원에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도 설치돼 재래시장가맹점, 중소가맹점 등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동일한 재화 · 용역 제공, 수수료율은 제각각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받는 혜택의 대가이다. 그러면 신용카드가맹점이 받는 혜택이란 무엇일까?

첫째,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재화 ·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입장에서는 외상매출로 인한 대손의 위험이 사라진다. 신용카드 회원이 재화 · 용역 구매대금의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그 결제일로부터 평균 3~5일 정도 후에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그 대금을 입금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경우 매출증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입장에선 당장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카드가맹점에서 재화 · 용역의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이 되면서부터 신용카드사가 설정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재래시장가맹점 · 중소가맹점 측에서는 동일한 재화 · 용역을 제공함에도 대형마트 · 대형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이후 신용카드사의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하고 재래시장가맹점 및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재래시장가맹점 및 중소가맹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편 지난 카드사태 이후 신용카드사들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카드채권 연체율이 하락하고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하는 등 신용카드사들의 경영상태는 호전됐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 제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의원발의안 22건 중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관련 법안이 15건에 달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전국 1,500여개 재래시장 내에 있는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간 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현재 2.0~2.2%인 수수료율을 1.6~1.8%로 인하하고, 신용카드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사별 최대 3.3~3.6%의 수수료율을 2.0~2.15%로 내렸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업계 관계자 등과 수 차례 회의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조속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재래시장가맹점 및 중소가맹점들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대형마트 ·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신속하게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25%로 올려

우리나라는 민간최종지출액 대비 신용카드 결제액이 53%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1개월 무이자 대출, 현금 소지에 따른 불편 해소,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가져다주는 장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카드에 편중된 지급구조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신용카드가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고비용 구조라는 지적들이 제기된다. 단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사가 끊임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현금, 직불(체크)카드 등은 최소한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금리 등에 반영된다고 봐야 된다.

현재 직불(체크)카드의 경우 그 비중이 신용카드의 10% 수준이지만 그 이용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직불(체크)카드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연말 세금정산시 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와 차등화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직불(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
jbae@korea.kr

안전한 · 편리한 · 쾌적한 도로, 우리 손으로

'첨단'이 유행이다. 기존 방식, 케케묵은 생각으로는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 맞춰 도로관리도 첨단을 달린다.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 바쁘게 뛰고 있는 그들의 어깨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바쁘다〉에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구경해 보실까요?

손종철 과장

이동호 주무관(왼쪽), 박덕호 사무관

양성희 사무관(왼쪽), 이재만 주무관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편리한 도로, 쾌적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 IT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미래를 주도할 저탄소 녹색교통 및 안전사회의 초석을 다지고 국가품격 제고에 일조하기 위해서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다. 대한민국의 1만3,905km에 달하는 국도를 담당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맡다 보니 업무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급변하는 IT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환경의 변화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끊임없는 호기심과 열정, 예리한 판단력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과원들이 열심히 땀 흘린 결과 손종철 과장을 중심으로 과원 대부분이 IT 기술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갖게 됐다.

모든 교통정보를 한눈에 신속하게

첨단도로환경과 업무는 크게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업무와 일반국도 시설물 관리 업무로 나뉜다.

ITS는 도로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실력이 출중한 다섯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별 채용된 김정완 사무관, 박성룡 사무관, 다재다능한 이재선 사무관, 이장원 사무관, 이현재 주무관이 그들이다. 교통방송 · 인터넷 · 내비게이션 · 휴대전화 · 도로상 전광판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교통정보가 이들의 노력으로 이용이 용이해진다. ITS는 도로의 양적 확장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도로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 교통혼잡비용 절감, 대기오염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SOC에 I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해 건설비용보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스마트 SOC'라 부른다. 최근 녹색성장이 국가 어젠다가 되면서 스마트 SOC를 활용해 녹색교통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ITS 구축은 전국 도로 총 연장의 8.4% 수준이라 ITS 선진국인 일본의 구축률 30%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2020년까지 25% 이상으로 ITS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그렇지만 양적 물량 확충에 욕심내지 않고, 네트워크 운영상 결점이 되는 ITS망 구성상 부분적인 미연결 구간이나 관리청별 미연결 구간의 연계에 치중해 효율적 정보제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항상 따뜻한 말 한마디로 직원들을 챙기는 박덕호 사무관과 이동호 주무관은 교량과 터널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국도상에 건설된 교량 5,317개소, 터널 203

(왼쪽부터)이재선 사무관, 김정완 사무관, 이장원 사무관

박성룡 사무관, 배주희 직원, 이현재 주무관

김기현 사무관, 류재원 주무관

개소 195㎞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1994년 10월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도로시설물 관리에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되도록 교량 · 터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방면으로 박식한 양성희 사무관, 이재만 주무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중앙분리대 · 보행자도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있으며, 출퇴근 · 통학 · 장보기 등에 활용 가능한 생활 밀접형 자전거 도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도로를 '이동+휴식 · 조망 · 문화' 공간으로

이장원 사무관은 도로경관이 뛰어난 지점에 쉼터를 조성하거나 조경을 추가하는 등 보고 즐기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관도로 조성사업, 도로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이동통로 설치 사업 등 친환경 도로조성을 진행한다. 이제 도로는 단순한 이동의 공간이 아닌 휴식 · 조망 · 문화의 공간으로 변신해야 할 때다. 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 국민들에게 더 친근한 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도상 과적차량(기준을 초과한 중량 · 크기의 차량) 단속 업무로 각종 민원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김기현 사무관, 류재원 주무관, 우영두 직원. 이들은 늘 친절함을 잃지 않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반복적이고 시간을 가리지 않는 민원으로 힘이 들 만도 한데 친절한 민원해결이 자신들의 임무라며 열심이다. 근래엔 과적단속의 폐해를 근절하고자 무인과속 단속기와 유사한 무인과적 단속기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

직원들이 밤낮으로 바쁜 업무와 민원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 지원과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는 배주희 직원 덕분이다. 자칫 업무에만 몰두해 가라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준다.

국민들이 교통정보를 이용해 명절이나 주말에 차가 덜 밀리거나, 안전한 국도 관리로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 때면 우리 업무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노력하는 만큼 국민생활이 더 윤택해진다는 믿음을 갖고 첨단도로환경과는 안전한, 편리한,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달릴 것이다. 나라경제

글 **손종철** 과장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다. DAC 가입을 계기로 50여년의 원조 역사를 가진 선진공여국과 인프라 투자와 기술지원을 앞세운 신흥공여국 사이에서 한국이 비교우위와 경쟁력이 있는 원조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나라경제』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원조 분야는 무엇이며, 한국 ODA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세계와 나눈다

원조 받아 성장한 한국 … 주는 것은 아직 미흡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 동부 외곽 이스트랜드 루아이(Ruai) 지역에 있는 응군디(NGUNDI) 초등학교 아이들이 낯선 이들의 방문에 환호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08년부터 250만달러를 들여 나이로비에 2개, 티카와 나쿠루에 각각 1개씩 총 4개 학교를 새로 짓는 등 케냐 초등학교 건립 및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해라 할 수 있다. 선진국 원조를 받아 성장한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가입은 2009년에 했지만 실제 발효는 2010년부터임).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해 유상과 무상,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ODA 정책을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0년은 크나 큰 도전의 해이기도 하다. OECD DAC에 가입하고 기본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원조전략과 방법 그리고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2009년 ODA 규모 8억2천만달러로 OECD 19위

한국은 1945년부터 미국·UN 등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오다가 1995년 수원국에서 졸업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50년 동안 받은 해외원조 규모는 총 126억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해외원조는 우리가 1960, 70년대 빈곤을 탈피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3년에 미국 USAID(국제개발처)와 협력프로그램으로 개도국에 대한 연수생 훈련을 처음 시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외원조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설치되면서 시작됐으며,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면서 현행 추진체계가 확립됐다. 정부의 ODA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 2005년 7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08년에는 8억달러를 넘었고, 2009년에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 수준인 8억2천만달러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19번째 수준이다.

이러한 원조규모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고 선진국에 비해 ODA 역사가 짧다는 점에서 8억2천만달러 수준의 원조규모가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받은 원조규모나 우리의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면 GNI 대비 0.1%는 OECD 평균 0.31%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ODA 규모가 총액이나 GNI 대비 비율 면에서 선진 공여국에 비해 낮다는 사실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표〉 한국의 ODA 규모(OECD DAC 잠정통계) (단위: 백만달러, %)

	2008년	2009년	증감률	비중
ODA(A+B)	802.3	815.8	1.7	100.0
양자간 ODA(A)	539.2	580.3	7.6	71.1
무상협력	368.7	366.1	−0.7	양자 중 63.1
양허성차관(EDCF)	170.6	214.1	25.5	양자 중 36.9
다자간 ODA(B)	263.1	235.5	−10.5	28.9
ODA/GNI(%)	0.09	0.10	0.01%p	−

먼저, 추진체계가 다원화돼 있다. 유상지원과 무상지원을 위한 EDCF와 KOICA가 각각 설치돼 있고, 30여개 행정기관에서도 개별적으로 ODA를 추진한다. 반면 이들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절차나 시스템은 완비돼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ODA 규모에 비해 성과가 낮고 사업이 중복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

둘째, 다원화된 추진체계는 결국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이념·목표·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낳고 있다. 그간 무상원조를 대표하는 외교통상부는 인도적 지원에, 유상원조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에 ODA 목표를 뒀으며, 각각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이 중심이 되는 ODA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셋째,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그간 너무 많은 국가에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지적하는 ODA의 파편화와 분절화가 심각하다. 국무총리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지원국가는 104개이며 총 사업 수도 1,073개에 이른다. 이와 같은 지원방식으로는 실질적 지원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ODA 선진화 방안 마련할 것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그간 우리 ODA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 상반기에 ODA 정책과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화 방안이 포함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ODA의 이념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이미 한국 ODA의 기본정신과 목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선진화 방안은 그 기본정신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 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를 설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ODA 규모 GNI 대비 0.25% 수준 확대'를 국제사회에 이미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연차별 재정계획 수립, 무상·유상지원 간 적절한 재원비중 설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다원화된 ODA 추진체계의 통합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이미 외교통상부를 무상지원, 기획재정부를 유상지원 주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장 물리적 통합은 어렵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총괄·조정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해 마치 하나의 기관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는 상반기에 ODA 정책과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ODA 이념 및 목표의 구체적 제시, ODA 추진체계 통합, 지원대상 분야와 아이템 선정, 유·무상을 통합한 중점협력국가 선정 등을 담을 것이다."

넷째, 유·무상을 통합한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할 것이다. 우리 ODA 규모를 감안할 때 100개가 넘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으므로 이를 30개국 이내로 축소하고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정된 중점협력국별로 지원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섯째, 지원대상 분야와 아이템을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물론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서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라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우리의 개발경험과 원조경험 중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정책·제도·사업·기술 등을 선정해 콘텐츠를 정리하고 모듈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 국가별로 지원 분야를 2~3개로 압축해서 원조성과를 높여야 한다.

여섯째, 기존 ODA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여기에는 ODA 분절화·파편화 극복 방안, 효과적인 ODA 사업방식, 국제기구·선진국과의 원조분업 등 다각적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추진방식 검토에 있어 수원국에 우리의 진정성·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ODA 규모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전략, ODA 관련 NGO나 민간기업과의 유기적 협력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다.

박구연
국무총리실 개발협력기획과장
kuyeon@pmo.go.kr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통해 경제한류 일으킨다

지난해 11월 17일 경기도 과천 KT MOS 관제센터에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20여개국 재해예방 관련 공무원들이 방문해 IT 기술을 활용한 재난재해 관제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약한 한국 경제발전의 동인은 세계 석학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왔다. 전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1인당 GDP는 채 100달러가 안돼 당시 아프리카 국가보다 크게 낮았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개도국 중에서 최초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당시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다른 개도국들은 여전히 장래가 불투명하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개도국들이 우리 경험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 추구

똑같은 재료로 어떤 사람은 헛간을 짓는 반면 어떤 사람은 궁전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일부분이었을 때는 못사는 한 지방에 불과했지만 독립하고 난 다음에는 아시아의 부국으로 성장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부존자원이 아니다.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발전을 이루느냐 하는 전략이며 이러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인도의 경제개발계획 같이 완벽하지만 실천이 안되는 계획은 무의미하며, 제도적 인프라가 열악한 개도국에 미국식 연방준비은행 제도를 도입할 수도 없다.

우리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전통경제학이론에서 이야기하듯 단순한 노동과 자본의 기계적 결합의 결과가 아닌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결과다. 이러한 플러스 알파를 구체화해 수요가 있는 개도국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이 KSP로, 지난 2004년 베트남 ·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지난 6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둔 성과도 적지 않다. 베트남은 수출금융제도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책자문에 따라 2006년 5월 베트남개발은행(VDB; Vietnam Development Bank)을 설치했고, VDB 운영에 대한 후속 컨설팅이 실시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의 경제자유구역 설치 · 운영 경험을 토대로 수출활성화를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제안을 수용해 2008년 12월 나보이에 경제특구를 지정했고, 나보이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법률 구축 등 후속컨설팅이 진행중이다. 아제르바이잔도 우리의 WTO 가입전략 수립 경험을 공유해 2008년 WTO 가입협상 시 활용했다.

한편 KSP는 ODA 지원대상국뿐 아니라 ODA 비지원국인 쿠웨이트 등에도 정책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부의 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KSP는 최근 개도국 수요가 급증하며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선 개발경험 공유 수준이 과거 단순한 경험 소개에서, 개도국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현지에 적합한 계획 · 제도를 함께 만드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과정에서도 IT분야의 우리 개발경험 전수가 중요한 협상의 구성요소로 활용됐다.

2009년에는 KSP를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Shaping the Future with Korea)으로 브랜드화하고, 기존 단년도로 실시하던 전문분야별 정책자문 방식을 보완해 수원국의 중장기 경제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 컨설팅을 3년간 실시하는 중점지원국 제도를 도입했다. 중점지원국 시범사업으로 경협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을 선정, 베트남의 중기 경제 · 사회 발전계획(2011~2020) 수립과 연계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을 실시했다. 2010년엔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우즈베키스탄을 중점지원국으로 추가 지정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KSP를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원조모델의 대표 사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지원국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아프리카 · 남미 등 지역별 경협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발전경험 공유를 확대할 것이다."

경제개발경험 체계적으로 정리

하지만 개도국의 KSP에 대한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소중한 자산인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노력이 부족해 제공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 발전경험이 개도국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발전경험을 세계 문화유산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KSP 지원사례, 개도국의 공유 희망과제 등을 감안해 ①과거 고도성장 사례와 최근 경험 ②정부정책뿐 아니라 민간 혁신사례 ③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포함해 2010년에는 20개, 2012년까지는 100여개의 정책사례를 정리할 계획이다. 개도국이 쉽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원인(Why), 정책내용(What), 추진방법(How), 평가(Evaluation), 시사점(Benchmarking)을 일목요연 · 명확하게 정리하고, 발전과정에 직접 경험을 가진 세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정책집행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Sound Library)할 계획이다. 모듈화된 자료는 개도국 정책자문에 활용하고 국제기구에도 제공해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차관 시 개별 구성요소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또한 KSP를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원조모델의 대표 사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지원국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아프리카 · 남미 등 지역별 경협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발전경험 공유를 확대할 것이다. 특히 6.25 참전국 등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에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의 마음으로 KSP 우선 지원을 고려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도국 정책자문 및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판 경제발전 비법 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경험을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우수 전문 컨설턴트와 민간 컨설팅 회사를 육성하고, 개도국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 연수를 활성화해 개도국이 우리 경험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이다. KSP 시행과정에서 발굴된 사업은 원조자금 · 민간투자 등과 연결해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 등 하드웨어와 시설 운영기법 등 소프트웨어를 일괄 지원함으로써 원조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허장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huhchang@gmail.com

KSP 발굴사업 차관자금으로 적극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 11월 카메룬 경제기획지역개발부와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김동수 수출입은행장(오른쪽)이 루이스 폴 모타제 카메룬 경제기획지역개발부 장관과 계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도국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다.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통신 ·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주로 지원한다.

22년간 47개국에 5조9,260억원 지원

1987년 기금 설립 이후 2009년까지 47개국에 5조 9,260억원을 지원 승인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자원협력, 신흥시장 개척 등 경협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 중남미 지역으로도 지원을 다변화했다. 분야별로는 1990년대까지 교통 등 경제인프라를 중점 지원했으나, 2000년대 이후 교육 등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EDCF는 도로 · 전력 · 통신 등 경제인프라 및 수자원 · 보건 등 사회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고, 간접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2004년 고려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EDCF는 지원규모의 4배에 이르는 GDP 증대 및 11배에 이르는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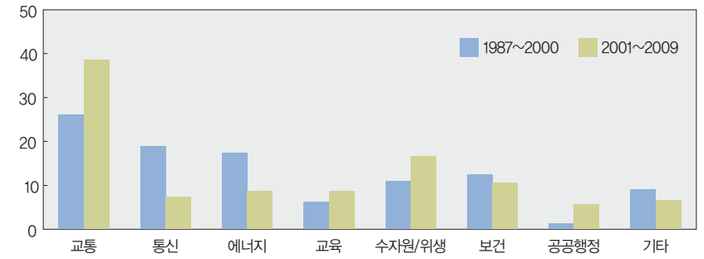
또한 EDCF는 아프리카 · 독립국가연합(CIS) 등 자원부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정부의 해외자원 · 에너지 외교를 돕고, 녹색성장 관련 분야를 중점 지원분야로 설정해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개도국 경제성장 지원으로 개도국 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해 궁극적으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EDCF 지역별 지원비중(2009년 말, %)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대양주	합계
68.9	5.9	14.8	3.4	6.7	0.3	100

경협 거점국가 중심으로 지원 확대

〈그림〉 EDCF 분야별 지원비중(%)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대외원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유상원조 자금인 EDCF 규모를 늘려나감과 동시에 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아시아 중점 지원기조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아프리카 · 중앙아시아 등 경협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

분야별로는 도로 · 교통 등 경제인프라와 보건 · 인적자원개발 등 사회인프라 지원을 병행해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 식량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규모별로는 지금까지 2~3천만달러 규모의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5천만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개도국 경제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EDCF 자금만으로 지원이 곤란한 사업은 수출입은행의 금융자금, 공기업 투자자금 등을 함께 활용하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한 정책컨설팅으로 녹색성장 산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산업 등 대형 국정과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비용을 최우선적으로 무상 지원할 것이다.

한편 개도국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내 관계부처 및 기관과 연계한 국별 맞춤형 원조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기구(MDB)와의 협조융자 사업을 확대해 선진화된 원조사업 관리기법도 습득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원조 공여 역사로 원조경험이 부족하다. 또 우리의 경제규모 및 집행여력을 감안할 때 원조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급격히 확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원조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최단기간 내 최빈곤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독특한 배경과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 선진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원조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 지원기조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경협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분야별로는 경제인프라와 사회인프라 지원을 병행해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EDCF는 새로운 원조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발전경험을 기반으로 개도국에 KSP를 통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그 결과 발굴된 사업을 EDCF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개도국 경제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원 후에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협력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계속해 개도국에 신뢰를 주고 개도국의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EDCF · KSP · 무상협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ODA 모델'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서귀원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사업부장
kwsuh@koreaexim.go.kr

2020년 베트남은 '산업화된 중진국'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홍강 개발사업은 총 7조원에 이르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하노이시를 관통하는 홍강 일대를 종합 정비하게 된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공적원조 지원이 가장 큰 국가다. 8,600만명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인 데다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의 전략적 위치, 풍부한 자원,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2006년 말 WTO 가입 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높다. 우리와는 월남전 참전으로 불행한 역사의 한 장을 같이한 '인연'을 갖고 있음에도 베트남은 한류에 열광하고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한국 경험 배우고자 하는 열망 커

한국경제는 그간 많은 개도국에 선망의 대상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잠시 관심이 뜸하기도 했지만, 빠르게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관심이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2011~20년 경제사회발전전략'을 준비하면서 주요 이슈에 한국의 경험을 반영하길 원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베트남에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집중지원사업이 시작됐다. 2020년까지 '산업화된 중진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한 것이다.

이 사업은 2009년 6월 중순 KDI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개발전략연구소(DSI) 간 MOU 체결로 본격화됐다. 이에 앞서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면담을 통해 5개의 공동연구 분야와 13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2020년까지 성장경로 및 성장잠재력 평가, 통화금융정책, 국토활용전략, 산업기술개발, 국영기업집단 효율화 등이 그것이다. 이후 연구진은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하노이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베트남 측과 분담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가 진행 중인 시점이었지만, 2009년 10월 하노이에서 열린 'Vina-Korea Week' 행사의 하나로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 포럼을 개최해 우리의 발전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2010년 3월 4~5일에는 연구 결과를 결산하는 고위정책세미나 및 전파세미나가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여기서 발표된 주요 정책건의들은 2010년 중반에 초안이 나올 경제사회발전전략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부각됐다.

첫째,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을 펴되 거시경제 안정 확보가 중요하다. 베트남은 140%에 가까운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대외의존도를 걱정하기보다 대외충격에 견딜 수 있게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거시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험상 수출 대신 내수를 부추기는 정책은 종종 물가·부동산가격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을 초래해 경기순환을 심화시킬 수 있다. 수입대체를 위한 중화학공업 육성도 자원배분의 비효율, 금융발전 제약, 높은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 운용 왜곡,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둘째, 튼튼한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 및 금융 부문의 체질 및 효율성 강화가 핵심이다. 베트남은 국영기업의 효율성이 국가경제의 성과를 좌우하고 이들에게 신용을 제공한 금융 부문의 건전성과도 직결된다. 근년에 국영기업 집단을 형성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표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수지만 쉬운 과제가 아니다. 소유주 및 규제자로서 정부기능의 상충, 정치적 영향, 경쟁 미흡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 부문이 상업성에 기초한 기업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우려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베트남은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이 취한 인적자본개발 정책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설립,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 국가기술자격제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국토이용계획과의 상호 일관성이 견지돼야 한다. 대안으로 한국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할 수 있다.

> "베트남에 대한 KSP 집중지원은 베트남이 '산업화된 중진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자문은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로서 대상국 경제발전에 총체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업도 가급적 이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발전경험 체계화 시급해

베트남에 대한 KSP 집중지원사업은 베트남이 '산업화된 중진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우리의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거시적·종합적인 자문은 그 결과가 거시경제 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시적인 특정 이슈의 자문에 비해 효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자문이야말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로서 대상국 경제발전에 총체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업도 가급적 이러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자문사업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자문을 위한 대상국 관련 통계나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선진국의 원조기구와는 차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간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평가하는 데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자문을 수행할 인적기반도 취약하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발전성과를 보고 우리 경험을 배우고자 한 개도국들이 정작 자문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공(혹은 실패)했다'고 말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대상국의 철저한 현실분석을 기초로 우리 경험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상대국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서구 선진국 등 다른 나라 경험과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남상우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KSP 베트남 집중지원사업 PM
swnam@kdischool.ac.kr

선택과 집중으로 무상원조 효과 UP!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지난 5월 12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2010 월드 프렌즈 코리아' 발대식에서 봉사단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월드 프렌즈 코리아'는 정부가 파견하는 4,500여명의 해외봉사단을 통합한 브랜드다.

2009년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및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HLF-4) 유치 결정 등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인 한 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 ODA의 최종 성공을 의미하기보다는 선진 공여국의 하나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뜻한다. 이러한 도전 앞에 외교통상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무상원조의 양적 ·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원조 일원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무상원조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무상원조는 1991년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이 각각의 업무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자 무상원조 규모는 1991년 2,500만달러에서 2009년 3억6,600만달러로 18년 만에 약 15배 증가했으며, 2009년 기준으로 전체 ODA의 약 63%를 무상원조 형태로 지원했다. 2009년 KOICA 무상원조 액수는 2억7,700만달러로 전체 무상원조의 약 76%를 차지한다.

韓 무상원조 비율, OECD 개발원조좋 최하위권

분야별로는 사회인프라 구축(교육 · 보건 등) 및 생산 부문(농어촌 개발 등)에 집중적인 원조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KOICA는 그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교육 · 보건 · 행정제도 · 정보통신 · 농어촌개발 · 산업에너지 · 환경 등 7개 중점 분야를 지정해 효과적 무상원조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별로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아시아 지역 개도국에 중점 지원하면서, 국제사회의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무상원조 대표 시행기관인 KOICA는 프로젝트, 개발조사, 긴급구호 및 NGO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시행 중이며, 개도국의 인적 역량 배양을 위해 연수초청, 봉사단 및 자문단 파견 등 기술협력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KOICA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봉사단 및 자문단 파견사업을 2009년 5월부터 각각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및 월드 프렌즈 어드바이저(World Friends Advisors)로 통합 브랜드화해 국격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기술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는 다른 선진 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시일에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무상원조 규모가 지난 십수년간 크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선진 공여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2009년 기준 우리의 무상원조 규모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의 10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전체 ODA 중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도 OECD DAC 회원국 평균이 90%에 이르는 데 반해 63%에 불과해 가장 낮다.

또한 그간 무상원조는 KOICA 이외에도 약 30여개 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사업 중복 및 원조 효과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부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발효 예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교통상부를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일원화된 무상원조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무상원조 파편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련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파편화된 무상원조 시행 개선을 위해 외교통상부는 올해부터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연1회 시행되던 각 부처 및 기관별 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KOICA 무상원조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상원조에 관계부처의 전문성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사업 시행을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ODA 시행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참여와 지원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ODA가 우리의 외교적 목표에 더욱 긴밀히 부합되도록 해 국격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무상원조 선진화 · 일원화 노력 강화할 것

외교통상부는 지속적인 원조 규모 확대 및 원조 선진화 계획 시행에 맞춰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선진 원조 시행체제 구축을 위해 국별지원전략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 · 추진하며, 2011년부터는 중점 지원 분야를 5개 분야(교육 · 보건 · 공공행정 · 농림수산 · 산업에너지)로 축소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원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NGO, 기업 및 여타국 원조 시행기관과의 개발 파트너십을 확대해 무상원조 시행기관으로서 KOICA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각 국별 특성에 맞는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 무상원조 사업을 발굴하고 재외공관 및 KOICA 해외 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추진 중인 무상원조 일원화 및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DAC 가입 등으로 변화된 우리 ODA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당연히 추진돼야 할 것이나, 무상원조 일원화 및 선진화 자체를 최종 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 현재의 제도 개편 노력은 '수원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자부심이 되는 원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 및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에 더욱 효과적으로 동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격을 제고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최성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장
sschoi91@mofat.go.kr

"세계적으로 원조기관의 모범 보이고 싶다"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은 1991년 4월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대외 무상협력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나라경제』는 박대원 KOICA 이사장을 만나 무상원조 사업의 성과 및 지향점과 앞으로 사업 계획을 들어봤다.

요즘 언론을 보면, KOICA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많이 높이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나?

KOICA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원조'를 모토로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개도국에 학교·병원·직업훈련원 등 건설과 관련해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사업이 있고, 개도국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국내에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는 연수사업이 있다. 또 국내 청·장년 인력을 파견해 현지 개발을 돕는 해외봉사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문가 파견사업, 해외재난 긴급복구 지원사업, NGO 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원조사업의 성과는 어떤가?

예전에는 원조사업이 각 나라마다 10만달러씩 주는 형태에 머물러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제는 원조 규모가 커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페루 외곽에 파치쿠텍이라는 인구 10만명의 빈민촌이 있다. KOICA는 이곳에 2007년 한-페루 친선모자병원을 지어줬다. 병원이 건립되기 전엔 30% 정도로 아주 높았던 산모나 태아의 사망률이 병원이 들어선 후 5% 정도로 급격히 줄었다. 2008년 11월 김윤옥 여사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주민 2~3천명이 나와 태극기와 KOICA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우리의 원조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작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직접 개도국을 다니다 보면 개발 원조사업에 대한 현지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KOICA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려는 분야나 지역은?

지난 2000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유엔에 모여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선언했다.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는 계획 달성이 요원한 상태다. 2008년 일어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빈곤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KOICA는 경제사회 성장기반이 취약한 최빈곤 개도국의 MDGs 달성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에 대한민국이 '은혜를 아는 나라'임을 알려야 한다. 어려웠던 시절 우리를 도와준 나라 중 아직까지 개도국 그늘 속에 있는 나라는 우정의 마음으로 도와줘야 한다.

원조에 대한 평소 소신은?

흔히들 원조를 하나의 투자로 생각한다. 우리가 이만큼 줬으니 나중에는 그만큼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자원부국에 원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그러한 생각의 일환이다. 물론 대외원조 시 그 같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원조는 선진국이 개도국을 일방적으로 도우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원조보다 '개발협력'이라는 말을 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을 합한다는 뜻이다. 두 손으로 주는 원조, 두 손을 맞잡는 개발협력. KOICA는 우리나라를 대표해 이 같은 원조사업을 펴고자 한다.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우리만의 원조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아프리카에서 오는 고위 관료들을 만나면 한국이 DAC에 가입해 너무 기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유인즉,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오면 "유럽이 지금의 발전된 나라를 이루는 데 150년이 걸렸다. 우리 원조역사가 50년이니까 아프리카가 유럽처럼 잘살려면 앞으로 100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 말을 꼭 한단다. 그런데 50여년 전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 DAC 회원국이 됐으니 아프리카도 희망이 있어 좋다는 것이다. 한국의 ODA 모델도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의 ODA는 개도국의 경제발전계획을 직접 짜주고 그중 한 부분에 예산, 즉 현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의 아프리카 원조역사가 50년이 넘지만 현지에 가면 변한 게 거의 없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ODA는 과거 우리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히 제시하고 공유하는 것이 돼야 한다.

30년 동안 정통 외교관으로 살다 2년 전 KOICA에 몸을 담았다. 외교관 시절이 그립지 않나?

2008년 KOICA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32년 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외교관으로 일한 30년 세월도 소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KOICA 이사장으로 일해 온 지난 2년이 매우 보람 있게 느껴진다. 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그 기쁨과 행복감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느끼기 어려운 감정이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우리의 도움으로 소득이 늘어 "한국 덕택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됐다"면서 기뻐하는 부모들을 봤을 때는 좀더 일찍 나눔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것이 후회될 정도였다.

내년이면 KOICA 설립 20주년이 된다.

20주년이면 명실공히 성년의 나이다. 한 단계 도약을 앞둔 시기이기도 하다. 18주년을 맞아 원조사업을 총망라한 「지구촌에 새긴 KOICA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지만, 20주년을 맞이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성년의 나이에 걸맞은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추진할 생각이다. 내년에는 원조 관련 국제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HLF;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이 회의의 유치는 KOICA 20주년과도 맞물려 우리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HLF를 통해 세계가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이른바 '서울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달라.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의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원조 규모 확대에 맞춰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보다 효과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원조사업을 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단시간에 경제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개도국에 잘 전달해 세계적으로 원조기관의 모범을 보이고 싶다. 대한민국은 많은 개도국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나라다. KOICA는 도움 주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며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中, 대외원조 통해 개도국 영향력 확대

중국은 대외원조를 통해 중국식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발전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의 원조정책은 다양한 정책목표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외교 및 안보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경제적 실익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고 있는 일본 등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적 ODA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반면 국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노르웨이 · 스웨덴 ·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국제적 연대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원조제공 채널이 다양화되고, 중국과 같은 신흥공여국의 원조비중이 증가하면서 국제 원조체제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 국제적 보편가치 중시

북유럽 국가들은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연대라는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 목표하에 ODA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수준을 제고하면서 원조형태 및 지원조건에서 국제사회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스웨덴 · 노르웨이 · 덴마크로 구성된 스칸디나비아 3국을 포함해 핀란드 · 네덜란드 등 서방 강소국(western middle powers)으로 분류되는 노르딕 플러스(nordic plus) 국가들은 국제적 보편가치를 중시하면서 원조조화와 분업을 통해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국제원조시스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북구형 원조모델의 차별성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은 있지만, ODA/GNI 비율이 UN의 권고수준인 0.7%를 이미 초과 달성하고 있는 스웨덴 ·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그 비율을 1%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조형태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원조 중시,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있다.

안보 차원 국익을 추구하는 미국

전통적으로 미국은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인도적 목적 외에 패권국으로서 지역분쟁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안보 차원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ODA를 활용했다. 냉전시대부터 해외원조 담당기구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ODA를 실시해 온 미국은 1961년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을 제정하고 원조기관인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설립했다.

2001년 이후 공여액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 최대 원조국이나 경제규모 대비 ODA 비율은 매우 낮다. 2008년 기준으로 280억달러 규모의 ODA를 공여했으나 GNI 대비 ODA 비율은 0.19%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 국가 중 최하위다.

일본, 무역확대 및 기업 해외진출과 연계

일본은 1950년대부터 해외원조를 시작해 1990년대 세계 최대 원조국으로 부상했으나, 2000년대 들어 장기간에 걸친 불황과 재정악화로 ODA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현실주의 입장에서 무역확대 및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ODA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즉, ODA 지원을 통해 경제실익을 도모하면서 기술협력사업은 물론 건설사업, 대규모 인프라 등 엔차관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일본은 2003년 '정부개발원조대강'(ODA Charter) 개정을 통해 중장기 ODA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원조정책 기획 및 실행 부문에 이르는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ODA 개혁을 통해 원조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실시 체제의 일원화를 목표로 2008년 10월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유상원조 관련 업무와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기술협력, 외무성의 무상원조 기능을 JICA로 통합한 바 있다.

중국, 경제외교 강화 수단으로 활용

중국은 개혁 · 개방노선 채택 이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프트 파워를 통한 외교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외원조가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자원 확보, 무역 · 투자 확대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94년 중국수출입은행이 설립돼 새로운 자금공여방식으로 저리우대차관이 도입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독립된 원조담당기관이나 부처가 없어 15~23개 중앙부처와 기관이 원조사업에 관여해 원조운영 체계가 다소 복잡한 양상이나 주도적 역할은 상무부가 맡고 있다. 상무부의 대외원조국을 통해 원조정책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외교부 · 재정부 · 수출입은행 · 중국개발은행 등이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연간 18억달러 정도지만 대부분 혼합신용을 활용해 무역 · 투자진출과 연계돼 있다. 수원국(受援國)의 거버넌스 및 원조관리 능력을 중시하는 기존 국제사회의 접근과는 달리 내정불간섭 · 호혜평등 등의 원칙에 근거해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 "스웨덴 ·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국제적 보편가치를 중시하면서 원조조화와 분업을 통해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적 목적 외 패권국으로서 지역분쟁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해 안보 차원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ODA를 활용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남남협력(개발도상국 간 경제기술협력) 차원에서 개도국과의 경협기반 확대에 대외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시장경제발전'을 의미)를 통한 중국식 발전모델을 확산하는 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해 점진적 · 단계적 경제개혁, 조화롭고 균형잡힌 발전전략,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적인 가운데 세계강국으로 우뚝 선다)의 대외정책을 추구하면서 개도국 경제발전에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신흥공여국으로서 한국과 상당부분 협력의 여지를 갖고 있다. 대외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무역 · 투자 · 원조를 연계하는 원조방식과 자금협력에 기반한 인프라 지원형태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도 매우 유사하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DAC에 가입한 한국의 원조정책과 경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시아 개발경험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정책규범과 권고사항을 준수하면서 중국과의 원조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원조메커니즘과 기존의 원조패러다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팀장
ykwon@kiep.go.kr

무리한 규모 확대보다 진정성 보여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되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형 ODA에 관한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형 ODA 모델을 정립해서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한국형 ODA 모델이 한국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수출하려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DAC 회원국이 되면서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ODA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에티오피아 남동쪽 도시 아다마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은 미술교사와 미용사를 양성하는 등 새로운 교육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아마다 제5초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봉사활동을 하는 박유진 단원(27)이 학생들과 핸드프린팅을 한 뒤 즐거워하고 있다.

우리 경험 일방적 전수 피해야

현재 한국형 ODA라고 회자되는 것은 대체로 '선진국의 전통적인 국제개발협력 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닌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으로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집중, 원조성과 및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전략 차원의 원조모델'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형 ODA가 어떤 정형화된 형태를 미리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굳이 어떤 형태를 한국형 ODA라고 정의하기에는 우리의 ODA 역사가 아직은 일천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여건에 맞는 원조를 시행하면 그것이 자연스레 한국형 원조가 되는 것이지 굳이 의도적인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정우진, 한국형 개발협력모델, KOICA)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ODA에 대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관심이 높아지고,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선진국들은 너무 앞서 있고 처한 시대적 환경이 달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반면, 짧은 기간에 선진국 문턱에 이른 한국의 경험은 그들에게 손에 잡히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내용 면에서 개발도상국의 피부에 와 닿는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과의 협력과 지원방식이 다른 나라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한국의 경험에 바탕을 둔다고 하여 한국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고자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도 빠른 경제개발과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경험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성공 스토리일 수는 없다. 각국 나름대로 경제사회, 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국이 처한 상황이 우리의 과거 상황과 시대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능력범위 내에서 도움 주겠다는 자세가 중요

한국의 ODA사업은 국제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수원국을 지원하되 기술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협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터득한 고기 잡는 법을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가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찾아내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되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에 특화해 공적원조의 효과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국의 ODA 정책은 양보다는 질에 중심을 둬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성공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다. 후발주자로서 한국은 개발협력정책의 질적 우수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재원 면에서 선진국을 흉내낼 수 없고 그렇게 할 형편도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KDI가 수행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은 규모는 작지만 질적인 면에서 수원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내외 외교가의 입소문을 통해 여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지원요청이 늘고 있다. 만약 무리한 양적 확장 추구로 인해 내실 있는 자문이 되지 못하면 수원국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한국 ODA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수원대상국 선정이나 지원방식 결정에 있어 모든 국가가 사실상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고려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렵다. ODA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자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ODA는 지속되기 어렵다.

ODA가 우리의 실익에 연결되면 좋겠지만, 원조를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수원국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수원국 중에는 과거 식민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소위 선진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받은 경험이 있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원국들은 ODA의 배경과 진정성 및 질적 수준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ODA에

> "한국 ODA 정책은 양보다는 질에 중심을 둬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성공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다. ODA가 국가이익과 연결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수원국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의 국가이익을 지나치게 명시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전략에 도움이 안될 수 있다.

또한 ODA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 우리가 국제(금융)기구 등에 출연 및 출자하고 있는 재원을 우리의 개발경험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해마다 적지 않은 세금이 국제기구 등에 기부되고 있고 그 금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인데, 이 돈의 사용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역할이 별로 없다. 정부나 민간의 정보력 · 사업수행 역량이 국제기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큼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축적되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대외개발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ODA가 우리의 실익과 연결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수원국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실행방식이나 내용이 상대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에 정형화되거나 전시적 행정의 일환으로 취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원조공여국으로서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이 원조규모를 늘려감에 있어 지원대상 국가나 정책대상 영역을 무리하게 확대해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설광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sul@kdi.re.kr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나눔의 상징' 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족의 손길처럼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해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입니다.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나눔방법 개발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방법을 개발하여 나눔의 기쁨을 주고, 보다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곳에 지원

도움이 필요한 우리사회 소외계층과 사회복지기관 · 시설을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져 최종적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 확산

'나눔으로 얻은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 나눔교육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전화 한 통화 2,000원 060_700_1212 www.chest.or.kr

정책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교섭력 차이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1,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85.7%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 뒤 실효를 지켜보자는 조건부 도입이었고, 최근 원자재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여전히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진행 중이다.

『나라경제』는 정책 · 현장 담당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협의는 의무, 조정은 자율에 맡긴다

최근 급격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수급사업자들이 고심에 빠졌다. 그러나 이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원사업자와 만나 상의하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구체적 납품가격 결정은 시장자율에 맡기지만 원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것은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처음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실시한 것은 2009년 4월. 원자재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만나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받는다.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사업자단체에 설치돼 있다. 원사업자 대표 3인, 수급사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0년 2월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85.7%로 결과가 긍정적이었다.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됐다는 업체가 70.9%에 이르렀다. 신청금액 모두를 증액받은 업체도 45.1%에 달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더 높여야 하며 협의 기회가 더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1〉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효과 (단위: %)

	많은 도움	일정 도움	도움 안됨	무응답
2009년 9월 조사	50.4	33.9	3.1	12.6
2009년 11월 조사	60.6	25.5	2.2	11.7
종합	58.2	27.5	2.4	11.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표 2〉 납품단가 조정신청 대비 반영비율 (단위: %)

	반영 안됨	50% 미만	50~99%	전부 반영	무응답
2009년 9월 조사	2.8	23.9	41.0	25.7	6.6
2009년 11월 조사	1.2	20.5	20.8	51.4	6.1
종합	1.6	21.3	25.8	45.1	6.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노력으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제도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자금과 인력, 기술 등을 지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윈윈을 꾀한다. 강제력이 없는 만큼 공정위는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협력을 이끌고 있다.

임은규 공정위 하도급총괄과장은 "힘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와 제재를 위주로 한 법 집행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개입 이전에 기업의 자율적 법 준수 의지와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솔나 나라경제 인턴기자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서기관

"최소한의 법적 장치일 뿐, 상생협력이 중요하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2008년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가 납품을 중단하는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다.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납품단가 인하가 즉각 이뤄지는 데 반해 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불신이 커졌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제도를 만들 때 이견은 없었나?

중소기업 측은 별도 요청 없이도 원자재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단가가 올라가는 연동제를 주장했다. 솔직히 지금도 그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급 측면만 본 것이다. 납품받은 업체 입장에선 올라간 단가만큼 바로 소비자가격을 올릴 순 없다.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소비자가 공평하게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도 있고, 일단 만나서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입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처음 입법안이 나오고 발효될 때까지 일 년 이상 걸렸다. '누가 신청을 할 수 있겠냐'며 중소기업의 반발이 심했다. 국회의원들도 중소기업 의견을 따라 입법안을 냈다. 그러다 1대 1로 협의를 하면 협상력이 떨어지니까 단체로 하자는 입법안이 또 몇 개 나왔다. 그렇지만 단체행동은 일종의 카르텔이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자체 노력도 해야 하는데 단체로 협상을 하면 경쟁력 없는 업체가 묻어갈 수 있다.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해외로 돌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긴 논의 끝에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안에 동의하면서 어렵게 통과됐다. 단, 조건부였다. 1년 뒤 성과를 보자는 거였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최근 원자재가격이 오르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조정협의 신청이 얼마나 있었나?

조정협의 의무제는 협의 자체를 신고하는 게 아니다. 협의가 잘되면 우리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우리가 나서서 규제한 적도 없다. 가격흥정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 아닌가. 다만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 잘 활용되는지 알기 위해 공정위와 중앙회가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럼 효과를 알 수 없다는 뜻인가?

하하. 그렇지는 않다. 공정위 조사결과 조정신청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됐다는 업체가 70%에 이른다. 신청금액 모두를 증액받은 업체도 45%나 됐다. 협의가 잘된다면 효과는 몰라도 좋은 일 아닌가. 더욱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최후의 보루다. 여차하면 공정위에 알릴 수 있다는 무기를 주는 것만으로도 전보다 힘이 될 거다. 서면계약이 일상화되고 합의가 절로 잘됐으면 좋겠다.

보완할 점은 없나?

이 제도는 타협안이자 절충안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뒤에는 소비자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의무제가 있다면, 상생협력 공정경쟁협약과 같은 문화가 보완돼야 한다.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CEO 마인드가 중요" … "상생협력은 주고받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워크숍이 5월 13일부터 양일 간 파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업 구매담당 임원과 70여명의 협력사 대표를 포함해 총 150여명이 모였다. 사진 중앙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왼쪽이 정호열 공정위 위원장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1년. 조정신청은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인들은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고 서로 놓인 처지에 따라 입장차는 있지만 상대 입장을 이해도 하고 있었다. 『나라경제』는 전익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사업기획팀장과 신상홍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과장을 각각 만났다. 다음은 취재내용을 대화형식으로 재구성한 것.

전익주: 달라진 원자재가격을 놓고 서로 협의조차 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최소한 합리적인지 아닌지 들어보라는 제도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조정협의가 반드시 가격 인상으로 연결돼야 하는 건 아니다. 조정협의가 의무이지, 조정이 의무는 아니다.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신상홍: 좋은 제도가 도입돼도 수급업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교섭력이 떨어지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조정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거래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비중이 60%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단절을 감수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나. 현장에 가서 수급사업자들을 만나면 어려움을 호소하다가도 막상 건의자료를 내라고 하면 입을 다문다.

전익주: 2008년 원자재가격이 급등했을 때 사회적 여론은 대기업이 감내하라는 식이었다. 물론 대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다. 원자재가격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의 문제다. 협력사가 올려 달라는 대로 올려주면 가격경쟁력에서 밀린다. 공멸이다. 대기업만 일방적으로 책임져라 하기보단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전기료 감면, 세제지원 같은 지원노력 없이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 같아 아쉽다.

신상홍: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게 영업상 유리하고 성과일 거라는 점은 이해한다. 결국 기업 CEO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또 이를 지지할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2007년부터 정부가 주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맺어왔다. 현재 130여개의 대기업과 5만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양적으로 크게 늘었다.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협력업체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전익주: 상생협력을 하려면 서로 주기 위해 애써야 한다. 대기업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은 반드시 기술개발을 해서 피드백을 줘야 한다. 지금 보면 대기업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내가 이렇게 할게, 너는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늘 달라고만 한다. 힘이 세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다. 그 부품이 꼭 필요한 것이면 거래를 안 할 수가 없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고받음의 역할이 공유돼야 한다. 지금 있는 파이를 나누라는 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아니다.

신상홍: 대기업이 상생협력이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일방적 지원이라고 보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주면 수평적 파트너십을 갖게 될 날도 올 거다. 그때까지는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고, 대기업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자율조정하면 마일리지 쌓아주는 것도 바람직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시행 1년의 평가는 게임이론적 접근과 정책품질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납품단가 조정은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동안 하도급거래의 게임현장은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인하, 원자재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미조정 등 근시안적 보수함수를 추구하는 비협조전략의 행위 상황이었다. 조정협의 의무제는 여기에서 원·수급사업자들의 보수함수 유인 구조를 미래지향적 협조전략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동태적 게임의 규칙변경이었다.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실질적 성과와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부가가치(보수함수)가 플러스 효과란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행 1라운드 성과는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반복적 게임을 위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줬다고 판단된다. 원·수급사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왜곡된 가격결정 게임을 합리적 가격결정 게임으로 전환해 가격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유인 구조를 제공했다. 그러나 납품대금의 조정은 장기적 반복 게임이란 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성과 제고 및 관리를 위해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법제도 및 규칙의 유효성은 그 이행 대상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공유되고 합리적 협의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시행 1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인지도나 협의기회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30%로 높은 편이었다. 제도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 둘째, 제도에 대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삼자 지배구조보다 양자 지배구조에 의한 당사자 간 자율적 조정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납품대금 조정사항이 포함돼 시행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평가에서 원자재 가격상승 시 납품대금 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삼자 지배구조보다 가점의 가중치를 상향설정하고 조정비율에 따라 가점도 차등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정위와 대기업의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해 '납품단가 자율조정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납품단가 조정 우수사례 발굴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동태적 게임의 규칙으로 미래 할인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통의 빈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시행 1년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대기업과 협력사들의 갈등과 갈등관리 사례들을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공유해야 한다. 넷째, 원자재 가격상승 및 하락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체계적 상시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중소기업·정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하도급법 대상인 산업별 특성에 걸맞은 원자재 가격 상승·하락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제도가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표준계약서 양식 등에 포함된 납품대금조정 내용을 1년 시행평가를 토대로 규제 위주의 법 규정보다 자율적인 상생의 계약문화 구축 차원에서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 지식경제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도급위탁거래 공정화와 관련된 납품단가 조정 및 부당 납품단가 조항을 공정위의 법규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협력 문화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관보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kwanbo@catholic.ac.kr

*2010년 『나라경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작지만 강한 기업'을 찾아갑니다. 규모는 작지만 알찬 기술력과 도전정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히든 챔피언. 그들의 숨은 노력과 성공비결, 관련업계 동향까지 살펴보며 우리 기업의 가능성과 저력을 점검해봅니다.

토종 펭귄 '뽀로로', 세계 동심을 사로잡다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기획 · 마케팅 전문회사

비행기 조종사 고글은 썼지만 날지 못하는 펭귄 뽀로로. TV용 애니메이션으로 110개국의 아이들이 시청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뽀로로는 친구 이상이다. 프랑스 최대 방송사인 TF1에선 무려 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출판, 완구, 통장(국민은행), 케이크(뚜레주르)까지 관련 상품은 600여종에 이른다. 또한 배용준, 김연아와 함께 한국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뽀로로를 탄생시킨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는 애니메이션을 기획 · 마케팅하는 전문회사다. 60여명이 채 안되는 이 기업의 연간 매출은 300억원. 물론 뽀로로가 일등공신이다. 매출의 반 이상을 이 귀여운 펭귄이 차지한다. 하지만 성공을 거둔 다른 작품도 많다. '태극천자문'은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히트한 작품으로 미국 방영을 앞두고 있다. '치로와 친구들'도 일본 NHK, 영국의 채널5 등에 진출했다. 아이코닉스가 세계의 동심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

최종일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 대표

미개척 유아 애니메이션 시장에 도전

최종일 대표(41)는 "뽀로로가 첫 작품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수많은 캐릭터 중 운이 좋아서, 어쩌다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전략적 접근, 까다로운 마케팅 전략, 거기에 실패의 아픔까지. 성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겪었다. 그는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스토리 · 캐릭터 · 품질 등은 계속 나아지는데 왜 성공을 못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결국 찾은 원인은 작품 내부에 있지 않았다.

"문제는 시장구조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최강국은 단연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극장용 애니메이션, 일본은 TV용 애니메이션이 주를 이룬다. 아이코닉스도 TV용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었던 만큼 일본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01년 당시 일본에서는 연간 200편 이상의 애니메이션이 쏟아져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4~5편에 불과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주로 아동 · 청소년 · 성인용이었다. 아이코닉스는 유아용 제작에 나섰다.

시장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분석했다. 유아용 애니메이션은 부모가 선택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교육적 작품이 많다. "우리 애들이(당시 4세, 7세) 애니메이션 보는 걸 관찰했어요. 직접적인 교육 메시지가 아니라도 아이들의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알았죠." 여기에 재미를 강화했다.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아 뽀로로는 탄탄한 성공의 길을 맞이한다.

'뽀로로 시즌 1' 제작에 걸린 시간은 3년. 뽀로로 탄생에는 천 장이 넘는 그림이 밑받침됐다. 동물을 선택한 것은 사람일 경우 인종 · 문화적 배경이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강아지 · 곰 · 고양이 · 토끼 등은 이미 유명한 캐릭터가 있었다. "당시 핑구라는 캐릭터가 있었지만 내용을 차별화하면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핑구는 펭귄 가족만의 이야기지만 뽀로로는 펭귄 친구들의 이야기로 곰 · 여우 · 공룡 등이 등장한다.

2003년 EBS에서 방영된 뽀로로의 시작은 좋았다. 보통 유아용 애니메이션 시청률은 1~2%만 돼도 잘 나왔다고 하는데 5%가 나왔다. 하지만 초기 사업 전개는 힘들었다. 책으로 만들었지만 유통시킬 출판사를 찾지 못했다. 몇 군데 찾아갔다가 무안만 당하고 돌아왔다. 굳은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한 출판사를 찾았다. '적자일 경우 100% 보상해주고 흑자면 50%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발간 2주 만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다.

품질 중심 라이선스 관리로 브랜드 가치 높여

이후 여러 출판사가 줄을 섰고, 다른 라이선스 사업 제안도 물밀 듯 밀려왔다. 하지만 최 대표는 미래를 멀리 내다봤다. 쉽게 가는 법을 택하지 않았다. "당장 매출이 오르지 않더라도 파트너회사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죠." 로열티를 준다고 무조건 라이선스를 허락하지 않았다.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만 했다. 또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면 뽀로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피자나 아이스크림 업체에서도 라이선스 요청이 밀려왔지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고사하고 있다.

뽀로로가 나온 이후 국내 유아용 애니메이션 시장은 탄력을 받았다. 최 대표는 뽀로로 사례처럼 한국 애니메이션 사업은 전망이 밝다고 말한다.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이끈 '쉬리'처럼 '뽀로로'가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활성화의 기점이 된 것 같아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이코닉스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 직원들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최 대표는 개인비서는 커녕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직원도 없다. "우리 직원들은 제 출퇴근에 관심 없습니다"(웃음).

그는 이 일은 단지 직업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버틸 수 있고 효율도 높아진다고 말한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그 일을 즐기는 사람만큼의 성과를 거두진 못합니다." 그는 또한 모든 직원들에게 최고가 돼 줄 것을 강조한다. "세계적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고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더 빨리 뛰어야 하거든요."

2008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뽀로로의 브랜드 가치가 헬로 키티(4천억원)와 푸우(3,400억원)에 맞먹는 3,700억원 정도라고 발표했다.

최 대표는 "뽀로로를 얼마나 오랫동안 살릴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말한다. 뽀로로의 성공으로 다른 애니메이션 개발에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또 다른 도전 이유라고 말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화상품이기 때문이죠."

현재 아이코닉스는 '뽀로로 시즌 4'를 준비 중이고, 아동용 애니메이션 제작도 기획하고 있다. 또 콘텐츠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를 포괄하는 강력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중국, 4년 만에 5배 급증 … 한국은?

애니메이션 산업 동향

애니메이션 업계는 요즘 내우외환에 봉착했다. 국내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홀대를 받고 있고 해외에서는 경쟁국인 중국에서 대박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

지난해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은 전년 대비 30% 성장한 4,047억원에 달했다. 지상파는 방송시간의 1%, 케이블 전문채널은 전체의 35%를 국산으로 채워야 하는 2004년에 도입된 총량제 덕분이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규정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 KBS 2TV는 이달부터 애니메이션 '쥬로링 동물탐정'과 '최강 합체 믹스마스터' 시간대를 기존 오후 4시 30분에서 오후 3시 5분으로 옮겼다. 업체들이 요구해온 오후 6시대와는 정반대 방향이다. 오후 3시는 아동들이 귀가하지 않은 때여서 시청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에서는 방송사들이 애니메이션 산업을 적극 지원해 장편이 사상 처음으로 대박을 거뒀다. 장편 애니메이션 '시양양과 후이타이랑'이 지난해 8천만위안(약 144억원)의 흥행 수입을 거둔 데 이어 올 들어 속편이 1억위안(약 180억원)의 흥행 수입을 기록했다. 편당 제작비는 10억원 정도여서 초대박을 거둔 셈. 뿐만 아니다. 출판·문구·완구·의류·식품 등 캐릭터 상품의 총 매출규모는 무려 1조8천억원을 헤아린다.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미키마우스 등 디즈니 캐릭터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장편 애니메이션이 성공한 사례가 없는 한국은 차세대 애니메이션 산업 주도권 쟁탈전에서 중국에 밀릴 공산이 커졌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대박을 거둔 이유는 방송물이 성공한 이후 브랜드파워가 커졌기 때문이다. 상하이미디어그룹(SMG)은 2005년 이 애니메이션에 투자해 프라임타임대에 방송,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최고 1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애니메이션 육성 정책에 따라 방송사는 중국산과 수입산을 7대 3 비율로 내보낸다. 프라임타임대에는 외국산을 방송하지 않는다. 수입사는 쿼터제의 적용을 받아 자체 제작분만큼만 수입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중국 애니메이션 제작량은 급증했다. 2004년 2만3,800분에서 2008년 13만1,042분으로 4년 만에 5배 늘었다. 중국의 방송사들은 제작비의 절반 안팎을 투자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세제 감면과 투자 확대 등 금융지원책까지 내놨다.

때문에 국내 방송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프랑스처럼 지상파 방송사의 총예산 혹은 매출의 1%를 애니메이션 산업에 투자하는 내용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송사들은 제작비의 10%만 부담한다. 지상파가 프라임타임대에 국산을 방송하면 총량제 비율 산정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국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상품이고 문화적 장벽도 낮아 수출 주력상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방송드라마나 영화뿐 아니라 캐릭터 라이센싱 등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 이상이다.

유재혁
한국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yoojh@hankyung.com

한국인의 심리코드

'멋있는 보통사람'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심리코드를 '멋있는 보통사람'이라 할 때,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인화(人和)이다. 남들에게 무난하고 긍정적인 인물이어야 할 뿐 아니라 나름 세련된 모습도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특성이 어떻다고 생각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탐색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며 잘 웃고, 대체로 믿음직하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보람을 느끼고, 사려 깊다. 거의 모든 이들에게 친절할 뿐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도 철저하게 수행한다. 하지만 이따금 게으르기도 하다. 이와 동시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물의 다른 면을 보려고 한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믿고 싶어 하는 자신의 모습이다. 믿고 싶어 하는 자신의 모습이 실제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믿고 싶어 하는 우리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믿고 싶어 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동특성을 보이며 이들의 심리는 어떠할까?

'별로 튀지 않으려 한다. 아니, 튀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 비교적 외향적·사교적이고 싶어 한다. 특별한 매력은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미움 받을 이유도 없다.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조직 내에서는 무엇보다 인간 관계를 중시한다. 자신의 일에 책임감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한다. 일상생활에서 친구도 많아야 하며, 주위의 네트워크나 아는 사람을 적절히 잘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한다.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무난하게 사는 것을 선호하며, 인간성이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평범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한국인이 지향하는 평범하고 편안한, 안정된 삶의 겉모습에는 삶의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백조와 같은 우아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갈급함이 있다. 경쟁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한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바라보며 마음 속으로 갈등하고 고민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남과 자신을 많이 비교하며 대세 추종적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심리코드를 '멋있는 보통사람'이라 할 때,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인화(人和)이다. 남들에게 무난하고 긍정적인 인물이어야 할 뿐 아니라 나름 세련된 모습도 보여야 한다. 보통사람으로 살면서도 어느 정도 남들에게 그럴 듯하며 친절한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환상을 꿈꾼다.

이상적인 이미지로 KAIST 석좌교수 안철수의 모습을 동경한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보다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고 또 안정된 상태라는 점에서다. 현실 속에서 더 잘 부합하는 캐릭터는 인기 연예인 유재석이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열망이 높지만 갈등은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이다. 이런 심리 속에 「배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와 같은 자기 계발서에 마음이 끌린다. 한국인이 막연히 지향하는 정체성인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나름 열심히 살려고 애 쓰는 사람'의 모습, 즉 '멋있는 보통사람'의 코드가 무엇인지 그 책들이 알려주기 때문이다.

황상민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국내 소비자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다. 저서로는 「디지털 괴짜: 미래 소비를 결정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너 지금 컴퓨터로 뭐하니」 등이 있다.
swhang@yonsei.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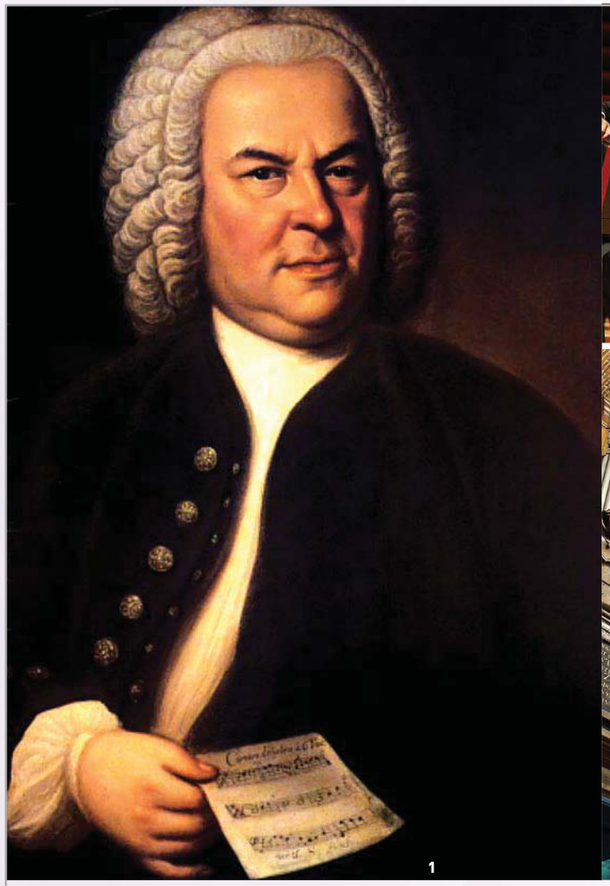
음악은 바흐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1685~1750)

클래식 음악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작곡가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흐'를 얘기한다. 사실 바흐의 곡을 연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의 음악은 유난히도 연주가들에게 많은 생각을 품게 한다. 악보를 보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자신만의 색깔로 연주할 수 있다. 바흐 음악은 연주가에 따라 같은 곡이라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함은 300여 년 전 만들어진 그의 음악을 현재 유행하고 있는 장르로 편곡해도 어색하지 않을 친숙함을 준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바네사 메이. 그녀가 연주했던 많은 음악 중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이 바흐의 곡이다. 그녀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를 드럼 반주에 맞춰 춤을 춰 가면서 연주했다. 바흐가 이 곡을 작곡했을 때 이런 연주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이러한 연주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토카타와 푸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이 곡은 원래 오르간 곡으로 작곡됐다. 바흐가 살던 시대에는 많은 음악이 교회를 위해 만들어졌고,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였던 바흐 역시 오르간 곡을 많이 작곡했다. 이 곡은 당시 작곡됐던 곡들과는 다르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 바흐의 젊음과 개성이 묻어난다. 훗날 피아노 · 관현악용으로 편곡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최근 부쩍 바흐의 음악을 재즈로 편곡해 앨범을 발매하는 연주가들이 늘어났다. 그중에서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을 재즈 스타일로 녹음한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음반을 통해 바흐의 원곡과 재즈로 편곡한 음악을 연속해 들을 수 있다. 이것을 듣고 있으면 바흐가 처음부터 재즈 스타일로 작곡했다고 해도 될 만큼 시대적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다. 이 곡은 불면증에 시달렸던 한 러시아 백작이 불면증 때문에 골든베르크라는 연주가에게 작곡을 부탁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면 음악이라는 타이틀에 부담을 느낀 골든베르크가 작곡을 하지 못하자 그의 스승이 다시 바흐에게 부탁하게 된다. 이 곡을 듣고 러시아 백작이 수면을 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흐는 한 가지 주제를 끊임없이 변형시키는 다채로움을 이 곡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한 음악적인 요소들이 재즈라는 장르와 만났을 때 한층 더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닐까.


1

2

3

4

1 바흐의 초상화 2 왼쪽부터 요요마, 바네사 메이, 장한나 3 파이프 오르간 4 독일 라이프치히 토마스 성당 앞의 바흐 동상

박소연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 제2바이올린 주자. 팀의 막내지만 시리즈 연주 〈히스토리〉, 전국투어 〈노란 음악회〉 등 연간 130여 회의 연주를 거뜬하게 소화해낼 만큼 뛰어난 프로정신과 근성의 소유자다.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 외에도 오래전부터 바흐의 음악을 재해석해 재즈로 편곡하고 연주해온 이들도 있다. 자끄 루시에 트리오(Jacques Loussier Trio)팀은 1959년 바흐 앨범을 낸 이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바흐를 시작으로 비발디 · 모차르트 등 많은 클래식 작곡가 음악을 재해석해 클래식 틀에서 재즈의 자유로움을 연주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바흐의 음악으로 돌아와 음악을 연구하며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장르의 결합으로 오랜 시간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바흐의 음악은 꼭 음악 장르와의 결합으로만 재해석되지는 않았다. 10여년 전 첼리스트 요요마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녹음했는데 CD뿐 아니라 6곡 모든 곡에 주제를 붙여 영상을 보면서 함께 감상할 수 있는 DVD를 제작했다. '무반주 첼로 소나타'는 바흐 음악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도 들어 봤을 만한 곡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한다.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과도 같은데, 연주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유명한 첼리스트였던 카잘스도 평생 단 한 번 전곡을 녹음했다고 한다. 장한나의 스승이었던 로스트로포비치도 일흔이 넘은 후에 녹음을 했다. 요요마는 이 모음곡에 음악정원, 감옥의 소리,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기, 사라방드, 희망을 위한 고투, 여섯 개의 몸짓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각 주제마다 그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적 효과로 바흐 음악의 이해를 넓히며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바흐는 생전에 자신이 작곡한 음악이 잘 연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곡의 악보가 유실돼 사망 후 잊혀져가는 작곡가였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음악가들은 작곡이나 연주 시 바흐 음악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다른 음악 장르나 또는 미디어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흐 음악을 바라보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300여년 전 작곡된 바흐 음악을 한번 들어 보실래요?"라고 물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편한 분위기에서 다양하게 변형된 바흐 음악을 먼저 들려주고 "이 음악의 출발이 300여년 전 태어난 바흐의 음악입니다"라고 얘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물가지수, 체감물가와 왜 다를까?

통계청은 물가상승률을 따질 때 동질동량의 가격변동을 산정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소비량의 증가, 또는 품질상승에 따른 가격상승분까지도 포함해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한다.

한 고객이 대형마트 채소코너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10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2.6% 상승해 2010년 2월 이후 연속적으로 2%대를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물가 동향은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과 서비스 품목의 안정세에 기인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기상조건 악화, 원유가의 상승 등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품목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09년 4월과 비교해 채소는 28.9%, 수산물은 9.3%, 휘발유 등 석유류는 11.2%가 올랐다.

요즘 출구전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논란이 많다. 금리인상은 물가수준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일반적으로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의하면 경제성장률 등 다른 요인의 변동이 없을 경우 물가상승률이 목표 물가상승률보다 크면 금리를 인상시킬 요인으로 작용한다. 목표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 2010년의 경우 3.0%±1.0%p 이다. 물가상승률은 매달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을 이용하고 있는데,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7% 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화정책의 준칙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경우 화폐의 구매력은 감소한다. 즉, 물가상승률이 20%이면 과거 천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1,200원을 주고 구매해야 하므로 화폐 소유자인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 각종 연금도 물가상승률과 연동돼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요즘 논의되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의 도입 여부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명목소득에 초과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구조에서는 물가상승에 의해 명목소득이 증가한 경우 세율이 높은 과표구간에 속하게 돼 납부세액이 더욱 증가한다.

매월 38개 도시, 489개 품목 조사

소비자물가지수가 국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므로 그 신뢰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 대체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보다 낮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해 매월 서울·부산 등 전국 주요 38개 도시의 약 2만3천개 사업체에서 489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된 가격은 산술평균해 평균가격을 구한 다음 2005년 연평균 가격과 비교해 조사도시의 품목별 지수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2005년 서울에서 조사된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천원이었고, 2010년 5월의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1,600원이라면 2010년 5월 휘발유의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는 160.0이 된다. 이와 같이 작성된 도시의 품목별 지수는 38개 도시 간 가중치와, 489개 품목 간 가중치로 가중 평균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한다.

이처럼 조사품목과 품목별 가중치를 특정 기준시점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시점 고정 가중산술평균 방식(라스파이레스 산식, Laspeyres Formula)이라고 하는데, 작성이 쉽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라스파이레스 산식은 과거 시점의 소비지출 구조 등에 근거했기 때문에 현실 반영도가 떨어지며, 그 결과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1996년 '보스킨보고서'에 의하면 상향편의 발생요인으로 대체편의, 할인점편의, 품질변화편의, 신상품편의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상향편의를 축소하기 위해 할인점 및 인터넷 거래 가격 반영 등의 다양한 개선책을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상향편의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월 주요 등락 품목

(단위: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배추(33.7), 양파(62.2), 돼지고기(3.6), 무(32.9), 토마토(11.3), 사과(7.9), 오이(-32.8), 호박(-26.3), 풋고추(-15.4)	배추(67.3), 쇠고기(국산:20.0), 파(83.4), 갈치(26.6), 풋고추(44.6), 돼지고기(-15.9), 쌀(-11.0), 고등어(-14.6)
공업제품	휘발유(2.0), 경유(2.7), 애완동물용사료(9.1), 가루비누(4.7), 등유(2.3), 다목적승용차(1.2), LPG(자동차용:-2.1)	휘발유(10.9), 경유(12.7), 등유(13.3), 금반지(6.9), 다목적승용차(6.1), 여자구두(16.8), LPG(자동차용:8.0), 컴퓨터본체(-25.7)
집세	전세(0.3), 월세(0.1)	전세(1.9), 월세(1.3)
공공서비스	문화시설입장료(3.4)	도시가스(5.2), 택시료(8.9), 이동전화통화료(-1.5)
개인서비스	국제항공료(3.4), 단체여행비(국내: 2.8), 공동주택관리비(-1.0)	납입금(유치원:6.0), 대입학원비(종합:4.4), 보습학원비(5.3), 입원진료비(3.9), 고입학원비(종합: 3.6), 공동주택관리비(2.6)

그렇다면 왜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보다 낮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까?

소비자물가지수는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

첫째, 통계청은 489개 품목의 가중치를 고려해 가중평균한 것에 비해 일반 국민들은 자기와 관련 있는 품목의 가격상승률을 단순히 산술평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양배추 100%, 상추 50%, 돼지고기는 10% 오른 반면, 휘발유는 5% 하락한 경우, 채식주의자라면 돼지고기를 제외한 품목의 등락률을 산술평균해 48.3% 올랐다고 느끼기 쉬우나, 통계청에서는 각 품목의 가중치가 양배추 0.1, 상추 0.4, 돼지고기 7.5, 휘발유가 31.2인 것을 고려해 오히려 1.3% 하락했다고 공표한다.

둘째, 통계청에서 증감률을 발표할 때는 한 달 전 또는 1년 전과 같이 정해진 시점과 비교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해당 품목이 가장 쌌을 때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배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예로 들면, 2008년 9월 112.2, 2008년 12월 60.6, 2009년 5월 173.1, 2009년 9월 129.3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2009년 9월 배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9.3으로 2008년 9월 112.2와 비교해 1년 전에 비해 15.2% 올랐다고 발표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1년 동안 가장 쌌던 2008년 12월 60.6과 비교해 113.4% 올랐다고 느낀다.

셋째, 통계청은 물가상승률을 따질 때 동질동량의 가격변동을 산정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소비량의 증가, 또는 품질상승에 따른 가격상승분까지도 포함해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489개 품목별 지수와 함께 생활물가지수·신선식품지수와 같은 특수 분류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년의 소비지출 구조, 인구 수, 상권의 변화 등을 반영해 국제기준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지수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나경

양동희
통계청 물가동향과장
dh22y@korea.kr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괜히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앞으로 그런 상품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한 상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리스크가 큰 상품에 투자했다가 관리를 잘못해 손실을 봤다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다.

흔히들 리스크(Risk)라고 하면 ‘위험(危險)’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처럼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품을 위험한 상품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가격 하락 = 위험’이 연상돼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위험과 달리 리스크는 관리 가능해

‘위험’이라는 말의 정확한 영어표현은 ‘데인저(Danger)’이다.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말할 때의 위험인 것이다. 그러나 리스크는 위험한 상황과는 다르다. 위험과 리스크 모두 불확실한 상황을 의미하지만 리스크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속성이 있다. 리스크가 있는 상품의 하나인 주식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잘만 관리한다면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리스크의 속성이다.

라틴어에서 나온 리스크라는 말은 본래 ‘용기를 갖고 시도해 본다’는 뜻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남학생이 사귀고 싶은 여학생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한다. 데이트를 신청하면 상대가 응해 줄 수도 있지만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따른다. 거절당할까봐 겁나서 데이트 신청을 포기하면 여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 따라서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상대가 응해오도록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자산운용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손실을 입을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두려워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책임지는 예금만 해서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없다. 높은 수익을 내려면 가격 변동의 리스크가 큰 투자상품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리스크가 없는 저축상품과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확실하게 교육시킨다.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과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 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가르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저축해서 돈을 모으자’, ‘투자해서 돈을 모으자’라는 식으로 생각해 저축과 투자를 비슷한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저축’과 ‘투자’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저축은 ‘아껴서 모으다’라는 뜻이다. 은행예금,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이나 연금이 대표적인 저축상품에 속한다.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리금의 손실을 볼 염려는 없다.

금융기관이 운용 결과를 책임져주기 때문이다. 즉, 기대수익률은 낮지만 리스크가 따르지 않는 상품이 저축상품인 것이다.

반면에 ‘투자’는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믿었던 대로 되면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리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손실을 봤더라도 투자를 중개해 준 금융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되든, 못되든 모두 투자자 책임이다.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는 주식 · 채권 · 펀드 · 변액보험 · 변액연금 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이 투자상품인 것이다.

예금금리가 1~2%, 2~3%가량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10%대의 예금금리 시대는 다시 오기 어렵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이제는 보유금융자산의 일정부분을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고서는 자산을 불리기가 어려워졌다.

10%대 예금금리 시대는 다시 오기 어려워

최근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가 됐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어떤 의미에서 투자의 시대가 됐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투자를 하지 않고는 자산을 불려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뜻이다.

운용의 세계에서 10년을 계속해 13~15%대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펀드매니저가 있다면 그는 최우수급에 속한다. 그런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은행이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정기예금의 금리는 이보다 높았다. 저축상품인 은행예금만으로도 자산을 불려가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저축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투자의 시대라는 말인가? 왜 굳이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저금리 시대가 정착돼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는 3~4%대에 있다. 1990년대까지 수십년간 계속 되어온 IMF 금융위기 직후의 두 자릿수 금리시대와 비교하면 저금리라고 할 수 있지만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면 그렇게 낮은 금리라고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볼 때, 경기가 회복되고 설비투자가 늘어나면 예금금리가 1~2%, 2~3% 정도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혼란이 오지 않는 한 10%대의 예금금리 시대는 다시 오기 어렵다고 보는 게 옳다. 이제는 보유금융자산의 일정부분을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고서는 자산을 불리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배우자나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자산을 운용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를 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만 한다.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
지난 36년 동안 대우증권 동경사무소장, 국제본부장, 리서치본부장, 현대투신운용 대표, 굿모닝투신운용 대표 등을 거치면서 은퇴 및 투자교육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저서로 「직장인의 노후설계와 퇴직연금」, 「당당한 인생후반 30년을 결정하는 자산관리의 원칙」 등이 있다.
chkang@miraeasse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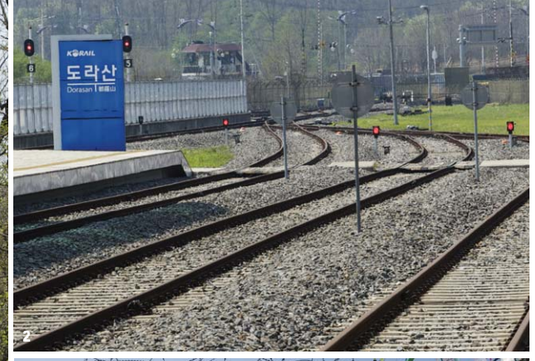
호젓한 쓸쓸함에 마음이 젖다

임진강 줄기 따라 연천 구간을 달리다 보면 용암지대가 오랜 기간 침식돼 형성된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다. 제주 해안 지역이나 여수 해역 등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주상절리는 거북 등껍질 모양의 굳은 현무암 용암덩어리다. 이런 주상절리가 병풍처럼 늘어선 연천 일대는 그 풍경이 다른 곳과는 구별되는 황량함이 있다. 아마도 DMZ가 가까워지고 시야가 가리는 곳이 없어 그런 느낌이 더하리라 생각된다. 최근에 이 일대는 트래킹 코스로도 알려져 인파가 부쩍 늘어난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제법 외국인들이 보이는 것이 한반도 분단역사가 빚어낸 기묘한 우듬지를 구경하려는 외국인들의 호기심도 한몫하는 듯하다.

전부터 나는 임진강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쓸쓸함이 더하고 호젓한 것이 저물 무렵의 산책로론 으뜸이다 생각하던 터였고,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 길을 따라 가보라고 지인들에게 추천하곤 했다.

율곡선생이 시와 자연을 즐겼다고 전해지는 화석정(花石亭)에서 내려다보는 DMZ

임진각의 망배단



1 지난 5월 8일 개장한 DMZ 트래킹 코스 **2** 북녘땅으로 이어지는 도라산역 철길 **3** DMZ철책을 따라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리본이 달려 있다.

강가에 서서 돌멩이처럼 한 두어 시간 서 있거나 가물가물한 유역에 그냥 멍하니 시선을 흘려 넣고만 있어도 그 풍경이 제법 황망하고 그윽해 돌아오는 길엔 만조로 가득 넘실거리는 심상을 기대해 보아도 좋으리라.

그중에서도 요즘처럼 여름이 다가오는 무렵의 임진강은 물결의 수위가 제법 좋은 그늘을 만들고 주변 갈대밭이 주는 황량한 구석은 사람의 마음을 처연하게 하기보다는 차분히 가라앉히는 음영을 제공해준다. 강은 모름지기 그늘의 미학이 살아있어야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에겐 임진강의 저녁산책은 잃고 싶지 않는 산책로로 자주 기억된다.

상류는 전형적인 산지하천으로 강바닥의 경사가 심하고 연안에 충적지가 발달하지 못해 중·하류 연안이라야 임진강어구평야라고 불릴 만한 충적지가 보인다. 하지만 상류 일대의 일품이라고 할 만한 울창한 소나무·참나무 숲과 더불어 석회암·규암·점판암·결정편암이나 판교 이천 지역의 화강암 덩어리들, 철원 평강 지역의 현무암 무더기들은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캄캄한 돌덩이를 가만히 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삶이란 때로 돌덩이를 가만 보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한 법이므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물 속 그늘이 주변 그늘과 닮아가는 풍경이 이름 붙이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불러일으키고, 멀리 산그늘이 밀려와서 강가에 한잎한잎 쌓이는 면은 그 풍경이 봄날 그늘에 앉은 곤충의 날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듯한 고혹이 있다. 입속을 맴도는 허기가 생길 때까지 그런 강의 저녁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자의 수첩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의 새순이 싹텄으리라 생각한다.

강은 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와 물빛을 노래하고 그 사이에 인간의 정념과 회한을 담아왔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나이에 강가는 제 수면을 통해 새로운 삶의 비의를 보여 주었고, 강심은 육체의 소멸을 크게 떠들지 않고 가도록 저를 찾아오는 방문객의 내적 질서를 고요히 응시해 왔을 것이다. 시라는 것이 자신이 고안한 시어의 고유성을 통해 삼라만상의 탄생을 돕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면, 내 쪽에서는 조금 고답적인 표현일지 모르나 시는 또한 그러한 참여로 인해 어떤 인간성의 회복에 있다고도 말하고 싶어진다. 그것은 세계관의 어떤 열림에 해당할 것이다.

불교미술가 김영주는 고대적인 세계관에서는 초자연·초현실적인 존재들이 현실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서로 간에 의미와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가 일원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한다. 그의 글에 의하면 삶 속에 영신적인 세계와 현실적인 세계가 함께하는 것이다.

임진강은 강원도 법동군 용포리의 두류산에서 방원해 개성시 관문군과 경기도 파주군 사이에서 한강으로 흘러오는 강이다. 옛말로는 칠중하(七重河)라 했고 길이 244km, 유역 면적 8,897.24㎢로서 한강의 제1지류에 해당한다.

강의 오른쪽으로는 아호비령산맥이 뻗어 있고 왼쪽 유역으로는 자잘한 지류들이 흘러 있다. 강원도 고미탄천과 경기도 평안천, 한탄강 등이 주요 지류라고 할 수 있는데, 5km 이상 지류들이 250여개나 돼 강으로 치자면 결코 곱고 아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축에 속한다.

고사를 들추면 고구려·백제·신라의 국경으로 분쟁이 잦은 지역에 해당해 6.25 전쟁 이전에는 고랑포까지 배가 다녔다고 한다. 수상교통의 요지로도 중요한 장소에 해당해 작은 나룻배는 안협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한다.

임진강 유역을 제대로 둘러보기 위해서는 유역 안 저수지를 돌아보는 것도 제맛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봉래호·죽대저수지·신당저수지·난송저수지·송도저수지 등이 모두 그 유역 안에 해당하므로 알아두면 좋다. 김포·고양·파주·연천의 비무장지대 인근을 따라 평화누리길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산책로가 개발돼 있으므로 통제구역 바깥이긴 하지만 남북 분단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이 구역의 현장성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멀리 보이는 철책에 묻어 있을 차갑고 비린 이슬 냄새가 강심에 실려 오는 풍경은 임진강 유역에서만 가능한 풍경일 것이므로.

글 **김경주** 시인, 극작가 / 사진 **장병국, 신상은**
김경주는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기담」, 「시차의 눈을 달랜다」 등의 시집과 여행산문집 「패스포트」 등이 있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김수영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건설 부실, 이번만은 지원으로 해결해선 안돼

임경묵
KDI 연구위원
미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최근 건설 부문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난해 중반에 비해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다. 그 가운데 중견건설사의 부도 소식이 들려오는 등 건설 부문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단체들은 정부에 각종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낯익은 풍경이다. 과거에도 건설 부문에 침체가 발생하면 건설관련 단체들은 지원을 호소했고 이에 부응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했다. 이번에도 정부 지원으로 위기를 넘겨야 하는 것일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눈부시게 개선됐고,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를 들어 600%가 넘던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은 200%대로 하락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시장에 시행과 시공의 분리가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 부채비율만으로는 건설업의 재무건전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건설업체들은 토지매입 업무를 시행사에 넘기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지급보증하는 형식을 통해 표면적인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행사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 건설업체에 부담이 돌아오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수익성·유동성 등 대부분의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들은 이미 매우 악화된 상태다.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건설업체 수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정부 지원이나 규제완화로 건설경기를 지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건설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수년에 걸쳐 나타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락은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및 규제가 부동산 경기에 대응해 자주 변경되면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건설업에 대한 지원 또는 규제완화가 이뤄진 것은 건설업의 고용 비중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나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건설업체 수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경기를 지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건설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수년에 걸쳐 나타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세계적인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 부실이 확산되는 가운데에도 우리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DTI나 LTV 등 관련 규제를 적절하게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했던 데 기인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한편 예금은행 전체 대출에서 건설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의 10%대에서 최근에는 25%까지 급등했다. 부동산 담보 및 건설업체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방만하게 집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충실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나라경제